

유호근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통 충북평화통일포럼 연구 위원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 비전통안보분과 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국가전략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청주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보훈학회 회장, 충북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천해성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통일부에 입부 (행정고시 30회)했다. 인도협력국장, 대변인,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남북회담본부장, 통일 정책실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초대 소장, 통일부 차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대북특사단 대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남북관계발전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기완 통일부 경남지역 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사)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미국 워싱턴대학교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경남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과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위원회 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이며 북한 사회문화 연구와 남북 문화의 소통을 주제로 학술 연구와 대중과의 소통을 고민하는 통일 디자이너이자 통일문화번역가다. 《북한의 언어: 소통과 불통 사이의 남북언어》, 《북한의 정치와 문학: 통제와 자율 사이의 출타기》 외 다수의 저서와 「북한의 아동영화 창작 지침과 교양양상」, 「남북생활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외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대변환의 시대, 한반도 통일의 시침과 분침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7명의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2020년부터 인류를 강타한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한편 미중 전략 경쟁,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도 결코 녹록하지 않다. 가히 대변환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7명의 전문가들은 대변환의 시대를 맞아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살려 한반도를 둘러싼 상세한 전망과 해법을 제시한다.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체제 구축, 중·장기적인 남북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 증대,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협력 과정의 국민적 공감 획득, 남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조건으로 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형성, 서로의 언어문화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교육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획한 통일특강 모음집인 만큼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는 MZ세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고자 했다. 이 책을 통해 청년 세대들이 세대 간 통일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남남갈등을 뛰어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공감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값 15,000원
ISBN 979-11-5706-248-5 (03340)



MZ세대가 이해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이야기

문정인
홍현익
조성렬
유호근
천해성
이기완
전영선



MZ세대가

이해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이야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문정인
홍현익
조성렬
유호근

천해성
이기완
전영선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햇볕정책, 동북아균형론 등의 주요 대북·대외정책 수립에 관여하였고, 남북정상회담에 수차례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이자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현익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외 교학 석사학위를,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경기연구원 이사, 미 듀크대학교 객원교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변영분과 위원을 거쳐 청와대 국가안보실 NSC 정책자문위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수석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립외교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조성렬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자문연구위원, 일본 도쿄대학교, 게이오대학교, 중국 외교학원 방문학자,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지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주 오사카 총영사의 직책을 맡고 있다.



MZ세대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궁금해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이야기

MZ세대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그기해해는
동동

하바는
는

평화통일이
를

이야기

문정인 천해성
홍현익 이기완
조성렬 전영선
유호근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

‘학생’이 학문을 연마하는 사람으로서 학예^{學藝}를 배우는 입장에서 있다면, ‘선생’은 특정 학문에서의 경험과 학예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할 의무와 역할을 지닌다. 그렇다면 선생은 언제나 옳은 길, 정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반면 학생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의 위치에만 있을까? 명사특강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교학상장의 프로그램이다.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염원하고 갈망하는 통일은 내적 통합을 이룬 상태의 완성된 통일이다. 즉, 영토·법·제도의 측면에 국한된 통일 한반도가 아니라 남북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와 대화, 화해, 협력, 궁극적으로 화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일컫는다.

그렇다면 화합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 화합의

궁극적인 본질은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데 있다. 여기서 평등이란 참정권을 갖는 법적 평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경제·지역적 상생 그리고 성별 간의 공평을 모두 포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평화의 조건이기도 하다.

우리는 분단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평화를 꿈꾸고 있다. 코로나 19 위기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 위기는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희망과 과제를 남겼다. 남북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달성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의제들을 진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의 진전, 한반도의 평화지수 상승, 남북 주민 간의 적대감 해소 및 동질감 회복은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할까?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전 생애, 전 사회적 공간, 모든 형태의 교육형식을 망라한 평화·통일교육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사들이 참여하는 통일특강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통합에 이르기 위한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한 386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등으로 구분되는 세대 간 통일 인식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하고, 남남갈

등과 남북 간의 갈등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성은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야 할까?

본 책자는 이상의 두 가지 거대 담론에 대한 해답을 1년 동안 모색해온 긴 여정 속에서 대화와 토론을 거친 소통의 결과물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책에 담긴 7가지 주제에 관한 내용들은 청주대와 국민대, 을지대의 전문가 통일특강을 모아 엮어낸 것이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과 강연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강의 내용을 담아냈기에 통일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다.

이 책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와 남북관계에 관한 이해가 진전되기를 바란다. 남북 및 남남갈등의 현주소, 남과 북의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에 대한 존중, 배려와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는 ‘세계 시민성’, ‘평화 시민성’이 발현되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분단된 한반도에서 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통섭의 지혜가 움트기를 기대해본다.

2021년 12월
국립통일교육원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세상을 ‘변환’시키고 있다. 또한 미·중 간의 새로운 변환이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도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의 변환은 나침반이 없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경로의 선택과 전략적 지향성은 미래 한반도의 명운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서는 이러한 ‘대변환’의 문제의식을 한반도 통일의 문제와 연관지어 청년 세대, 이른바 MZ 세대와 공유하기 위한 담론화 작업의 결실이다. 청년 세대에게 ‘평화와 통일’은 낯설고 어려운 주제이다. 본서는 평화와 통일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주의·주장에 머물지 않고 청년 세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의미와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다.

통일부의 대학 통일특강 사업은 지난 2016년에 시작하여 6년차에 접어들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각 대학 청년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제고와 통일담론 확장 그리고 일상과 연결된 통일 체험학습의 통일교육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1년 1학기 통일특강 사업에 선정된 청주대학교는 “대변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대, 우리의 지향성과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제로 통일특강 사업을 진행하였다.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주제에 적합한 다른 학교의 통일특강 내용을 선별하여 함께 엮어 금번의 통일특강 강연집을 펴냈다.

각 강의 내용 속에는 사계의 전문가 선생님들의 통찰력과 혜안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고,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촌철살인’의 논의들이 응집되어 있다.

1강_ 코로나 시대와 신냉전 구도: 미중대결과 우리의 선택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역임하였고, 세종연구소 이사장인 문정인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나타나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미중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지정학적 갈등, 경제적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양상을 전망하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느슨하고 비대칭적인 양극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냉전의 대두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실천적 노력으로 중견국가들과 협력을 도모하는 이른바 ‘초월외교

Transcending Diplomacy’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기초한 용기와 결기 있는 외교로서 ‘명민한 스마트 외교^{Smart Diplomacy}’를 제안하였다.

2강_ 한반도 안보 환경과 평화통일 전략 ...

세종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연구 활동을 수행하다가 국립외교원 원장을 맡아 재임 중인 홍현익 선생님께서는 한반도 통일은 이제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설교하면서 외부적 환경에 따른 한반도 분단 상황을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외세에 의해 한반도가 분단되었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외부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서 통일은 쉽게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통일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천적 고민과 북한과 미국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였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북미관계의 진전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의 평화통일 전략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동맹의 안보협력 속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의료와 방역의 협력뿐만 아니라 남북 간 호혜적인 경험을 증진시키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설명하였다.

3강_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제와 전망 ...

안보·북한문제 전문가이자 주 오사카 총영사에 재임 중인 조성렬 선생님께서는 현 국제정치상황을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여러 나라의 도전에 따라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는 혼돈의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북한의 향후 경로를 난비행, 정착륙, 연착륙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중국의 '중국몽'으로 인한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회색지대 사태에 대한 자주국방의 대비가 필요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4강_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지향성 ...

청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이자 본서의 편저자인 유호근은 한반도 국제정치와 안보 문제에 천착하는 가운데 동북아 안보환경의 문제를 잠재되어 있는 군사·안보적 갈등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이라 보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현상과 달리 군사·안보적 갈등은 국가 간 '패러독스'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 이는 역내 다자안보체도의 결여로 인한 안보 딜레마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분

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려는 미·일 동맹 강화, 쿼드 Quad,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북한의 핵 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강한 세력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 증대의 지향성을 가지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협력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북한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점진적 조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5강_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의 과제 ...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천해성 선생님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흐름과 박정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맥락에서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조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라는 두 가지 정책비전을 설정하고, 세 가지 목표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팬데믹 상황의 이른바 '뉴노멀' 시대를 분석하고 남북 협력 상황을 진단하면서 대결이 아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남북 평화의 로드맵으로 초보적인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과 함께 보건의료 공

동체, 경제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북아를 포괄하는 평화 안보 공동체의 지향성을 제시하였다.

6강_ 남북교류협력의 조건과 과제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이기완 선생님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 요인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북미관계의 문제, 그리고 북미관계와 연계된 남북관계의 문제,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의 남북관계와 중앙-지방 간 남북관계의 상호 연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탐구하였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대비하여 어떠한 단계별 추진 전략과 원칙들을 설정하면 좋을 것인지의 문제도 함께 성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척 정도에 따라 대북제재가 일부 해제 내지 완전 해제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을 미리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과 투명성, 공개성 원칙을 강조하고, 예산 낭비와 중복사업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남갈등의 해소와 남남통합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성공의 지름길임을 천명하였다.

7강_ 남북의 언어 차이와 소통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인 전영선 선생님은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는 언어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설명하면서 언어와 해석 공동체 그리고 북한의 언어정책,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 말다듬기 사업과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특히 남북한 주민들의 언어문화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적응과 언어 문제를 다루고, 이후 과제로서 어떻게 언어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말이 남한과 다른 점, 북한과 소통하기 위해 알아야 할 언어문화, 남북한 언어 차이의 증대 상황 등의 문제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남북한은 소통 없이 70년을 지내왔고 앞으로 더 시간이 흘렀을 때는 그야말로 이중 언어를 써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강조하면서 통일과 언어 공동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류와 서로의 언어와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본서의 간행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통일특강을 맡아주신 여섯 분의 강연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미래 한국의 정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사색과 성찰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혜안을 담은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 특강을 수강한 청년 대학생들의 소감문에도 이러한 공감이 잘 표출되

어 있다. 성찰과 경륜을 바탕으로 열성을 다 해주신 강연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린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76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장구한 한반도 역사에서 보면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어느 날 불현듯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변환의 시대에 한반도 통일의 시침과 분침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통일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 또 미래를 선도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당대의 시대적 소명이고 과제이다.

이 책을 통해 미래로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길 기대해본다.

2021년 12월

유호근(청주대학교 '통일특강' 책임교수)

책을 펴내며 · 004

서문 · 007

CHAPTER 1 문정인

코로나 시대와 신냉전 구도: 미중대결과 우리의 선택 · 019

CHAPTER 2 홍현익

한반도 안보 환경과 평화통일 전략 · 063

CHAPTER 3 조성렬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제와 전망 · 101

CHAPTER 4 유호근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지향성 · 127

CHAPTER 5 천해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의 과제 · 161

CHAPTER 6 이기완

남북교류협력의 조건과 과제 · 189

CHAPTER 7 전영선

남북의 언어 차이와 소통 · 213

CHAPTER 1

코로나 시대와 신냉전 구도: 미중대결과 우리의 선택



사회자 **문창로**

- 국민대학교 교학부총장 겸 박물관장
- 한국역사학과 교수

강연자 **문정인**

- 세종연구소 이사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특임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햇볕정책, 동북아균형론 등의 주요 대북·대외정책 수립에 관여하였고, 남북정상회담에 수차례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이자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코로나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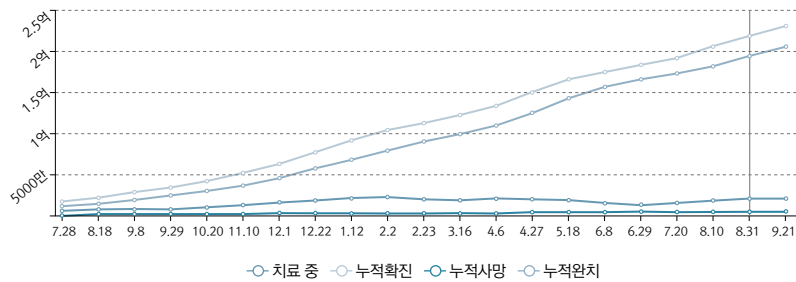
코로나19, 전 세계를 흔들다

2021년 9월 기준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억 명 이상 발생했고 사망자 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코로나19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이지만 인류가 처음 겪는 재난은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H. 맥닐(William H. McNeil)도 지적한 바 있지만 제국의 흥망은 결국 자연재해, 그중에서도 전염병 같은 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시카고대학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맥닐은 1976년에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Plagues and Peoples)》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맥닐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한나라도 전염병 때문에 망했고 로마제국도 전염병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물론 로마의 경우 결론적으로는 게르만 용병대장이 서로마제국을 침공해서 망한 것이지만, 그 전에 '안토니우스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추이

총 확진자: 232,677,786명, 사망: 4,763,742명, 완치: 207,571,093명



(출처: <https://coronaboard.kr/>)

역병 The Antonine Plague'이라는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로마제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적 기강이 와해되면서 그때 외세가 침공해서 로마제국이 망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전염병으로 제국이 망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사회제도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가령 14세기에 유럽을 휩쓴 페스트로 인구의 2/3가 사망하면서 장원제도가 무너지고 유럽의 농업자본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거의 5,0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들이 생겼던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공공보건과 방역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큼니다.

그런데 왜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날까요? 전염병은 인류가 가축을 집에서 사육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전염병이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 이 전염병을 우리가 과소평가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인간 예외주의

Human exceptionalism' 탓입니다. 르네상스 이후부터 인간은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전염병까지도 전부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각종 전염병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인간의 자만심이 더 커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스SARS, 신종플루 등이 유행했지만 치료제가 곧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을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공공보건의 영역, 방역의 영역으로만 본 거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바꾸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사회적 변화

...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삶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적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세계사에서 경제난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를 꼽아보면,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대불황Great Recession'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대봉쇄Great Lockdown'입니다. '대봉쇄'의 경제적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1년에 들어서 조금 호전되긴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금년에는 전 세계 경

제가 6% 정도 성장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국내적으로도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국민을 재난에서 구제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보장하다 보니 국가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면 우리 다음에 올 세대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일상의 경제적 변화뿐 아니라 국제자본주의 분업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디지털 러닝이라고 하는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세대에는 낯선 이 교육 방식이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생활도 마찬가지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페이스북에 다니는 제 지인은 예전에는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평생 재택근무를 도입했습니다. 제 아들도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출퇴근하는 직장을 다니다가 최근에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히브리대학교 교수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나왔던 빅브라더^{big brother}, 즉 권위주의적인 감시 사회가 등장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대다수 사람들은 QR코드를 갖고 다니면서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개인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예를 살펴볼까요? 전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홍채 인식,

안면 인식, 지문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전 국민을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모든 일상을 빅브라더인 중국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감시사회가 구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제와 개인의 자유 사이

...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존 롤스^{John Rawls}라는 분이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이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만들 때 기본 원칙은 소위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곤란한 사람을 먼저 도와줘야 한다는 '차별의 법칙^{difference principle}'인데, 이 차별의 법칙을 정치적 시스템으로 디자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헌법이라는 겁니다.

존 롤스 교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의 성별, 출신 지역, 재산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도와줄 것인지 안 도와줄 것인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게 인간의 기본심성이라고 봅니다. 그럼 헌법도 그렇게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는 나이와 성별에 관계

없이 지금 제일 위급한 사람부터 구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가 되겠지요. 사실 모든 국가가 그런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락다운이 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총을 들고 나와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식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모여 사회적 계약에 의해 만든 인위적 조직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주체는 개인들인데, 왜 국가가 ‘마스크를 쓰라 말아라, 식당은 몇 시까지 하라 마라’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 지금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교회에서는 방역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고 국가 지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겁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영국이나 이탈리아,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공리주의적인 접근을 많이 했어요.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 주장한 ‘공리주의(功利主義)’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80대 이상 되시는 분은 곧 돌아가실 분들이니, 코로나 사태에서 병상과 치료 장비가 부족한 경우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살리자는 것이지요.

가장 극단적인 공리주의적 접근 사례는 스웨덴의 ‘집단 면역’ 정책

이었습니다. 전 인구의 60% 이상 감염이 되면 집단 면역을 생기니까 그냥 내버려두자는 겁니다. 거기서 죽을 사람은 죽고 살릴 사람은 살리자는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 공리주의 접근은 어떻게 보면 적자생존의 원칙을 주장하는 다윈주의와 비슷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한국이나 대만, 중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체주의’를 지향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보다는 훨씬 코로나에 잘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공동체주의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공동체주의를 거의 전체주의적으로 강압하는 경우이고, 일본은 극단적 공동체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려면 확진자 숫자가 적어야 되니 검사 수를 줄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침에 대해서 전 일본 사회가 침묵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공동체주의적 접근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평가 받는데, 이런 분석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공동체와 개인의 자유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영향도 크고, 정치적 영향도 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치열한 정치철학적 논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변화의 흐름

달라진 세계화의 개념과 세계평화의 미래

국제관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우선 안보개념에 상당히 큰 변화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안보, 그중에서도 군사 안보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서는 아무리 한 국가가 방역을 잘해도 다른 국가와 왕래를 하다 보면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잖아요. 이처럼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 방역이 보장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계 안보(Global Security)'이고 군사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안보(Biological Security)'입니다. 그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이 존중되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그렇게 빨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화가 인류에게 반드시 축복만이 아닌 엄청난 저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산업은 '글로벌 공급 사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부품공장이 문을 닫으면 한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부품이 없어서 조립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은 나라들에서 세계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며 결국 자국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과거에는 전부 아웃소싱을 주었던 '반도체'를 앞으로는 미국에서 제조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세계화의 묘비명'이 코로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세계화의 개념에 큰 변화가 올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다음은 세계평화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논쟁이 지금 국제정치학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MIT의 국제정치학 교수 배리 포젠^{Barry R. Posen}이 '전염병을 통한 평화 Pax Pandemica'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각국 정부가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잠수함이나 함정의 밀폐된 공간에 군인을 투입할 수도 없고, 병영에서 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방역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다 보니 정부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국방비가 감축될 수밖에 없고, 전쟁할 이유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와 정반대로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의 스티븐 윌트^{Stephen M. Walt}

교수는 역사적 사례를 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나라마다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을 거라는 뜻입니다. 히틀러가 1932년과 1933년, 연이어 선거에서 승리하며 권력을 장악하였을 때,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함께 실업률이 높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듯이 말이죠.

아시아 인종에 대한 배척과 증오

...

요즘 아시아 혐오범죄로 나타나는 신^新 황화론의 등장은 우리 한국인이 걱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화론^{黃禍論}’은 19세기 말, 통일된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가 황인종을 억압하기 위해 내세운 모략입니다. 청일전쟁 말기인 1895년 빌헬름 2세는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면서 황색 인종이 서구의 백인 사회를 위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4~5세기에는 훈족, 13세기에는 몽골족의 침공을 받았던 유럽인들에게 황인종이 사실상 공포의 대상이었던 점을 악용한 것이죠.

1920년대에 들어서 일본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섬유시장에서 일본이 엄청나게 팽창하게 됩니다. 이후 유럽에서 다시 황화론이 등장했고, 1930년대 후반에는 일본에서도 ‘대

동아공영권’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 주장이 황인종, 특히 아시아의 황인종을 위해서 자기들이 총대를 메는 것이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서구의 ‘황화론’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일본 경제가 잘 나갈 때 미국의 ‘재팬 배싱^{Japan bashing}’, 즉 일본 때리기가 나왔고 지금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서구의 황화론이 새롭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아시아 사람들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유럽은 거의 실패했거든요.

유발 하라리도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지금 서구가 내세울 게 없다. 아시아를 봐라. 지금 코로나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가. 서구의 우월주의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에 상처가 난 유럽인과 미국인들은, 아시아인에 대한 거부감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시작이 중국이고, 중국인은 황인종이라는 연결 관계를 떠올리며 아시아인과 황인종에 대한 경계와 증오를 키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2월 9일에 파리에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코로나가 유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파리 시내를 걸어가고 있으면 “Chinois, Chinois(중국 사람, 중국 사람)”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파리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핏박을 받다 못해 마스크 앞면에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Je ne suis pas un virus)’라는 글을 써서 붙이고

다닐 정도였어요.

지금은 뉴욕에서, LA에서, 텍사스에서 그리고 심지어 호주에서도 아시아인을 모두 중국인으로 매도하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 교수가 말했던 ‘문명 충돌론’의 출현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반중^{反中} 연합’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만약 유럽과 미국에서 아시아 황인종에 대한 배척 또는 증오 현상이 극대화되면, 1930년대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조선 사람으로서 일찍이 미국 유학을 갔던 윤치호의 영문 일기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영문 일기를 국문으로 번역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윤치호는 1880년대 기독교 재단 장학금을 받고 밴더빌트대학교에 유학을 갔다가 나중에는 에모리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1930년대 후반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주장에 동조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윤치호는 친일파로 분류가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영문 일기에 쓰여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사랑을 강조하는데, 정작 밴더빌트대학교가 자리한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와서 보니 흑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난 멸시와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일기에 ‘기독교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서구의 인종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라는 걸 느낀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마음이 결국 나중에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며 미국과 싸울 때 윤치호가 일본 편을 들게 된 이유

인 거죠.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 일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아시아 혐오주의를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질서 변화의 시나리오

...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정치에 나타난 대표적 현상으로 자국 이기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튀빙겐대학 내에 소재한 백신 연구소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메르켈 독일 총리를 포함해서 독일 정치인들은 백신은 인류 공공재로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자국 이기주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신 접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가 퇴치되지 않으면 감염자들이 자기 나라에 유입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공공재를 만들어서 백신을 전 세계에 골고루 보급해야 하는데, 자기 나라만 챙기는 ‘백신 민족주의’가 기세를 부리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모두 백신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적 지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국제정치의 어두운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는 세계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2020년에 미국과 유럽의 여러 학자들이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주장을 펴왔는데, 그 논쟁들을 정리해보니 대략 네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더군요.

첫 번째는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박사의 주장입니다. 키신저 박사는 코로나 사태가 5년 이상 장기화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중세의 성곽도시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급자족하게 되고, 자급자족이 어려워지면 주변 국가들과 연결해서 배타적 경제블록을 만들 것이라고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었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니 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정세 분석가 조지 프리드먼과 브루킹스연구소 존 앨런 소장의 주장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에서 승리하는 국가가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므로, 미국의 패권을 통한 새로운 세계 평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 패권을 잡아 그에 의한 세계질서가 온다는 주장 '팍스 시니카(Pax Sinica)'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지만 정작 중국은 안정되고,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중국이 이긴 게 아니냐는 거죠. 여기서 논쟁점은 중국의 패권을 통한 세계 질

서가 어떤 모습이나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공과 책봉 등이 있었지만 근대 국가 시스템에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중국 중심적인 지역질서가 생기고, 그다음 일대일로를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적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 '팍스 유니버설리스(Pax Universalis)'라는 주장입니다. 1991년 9월 23일 제1차 걸프전에서 미국이 다국적군을 이끌고 승리를 했어요. 당시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부시 대통령(아버지 부시)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아주 혁명적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패권을 통한 세계 평화를 추구하지 않겠다. 우리는 '유엔 또는 보편성을 통한 세계 평화(Pax Universalis)'를 추구하겠다."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엔 중심, 다자주의 협력을 통해 세계질서를 만들겠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선언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유엔 중심의 세계질서가 수립하려면 유엔을 포함해 모든 국제기구들의 기능이 활성화돼야 하고, 그러려면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협력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주장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는가

...

저는 미중관계에서 현상유지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현상 유지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느슨하고 비대칭적인 양극체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왜 느슨할까요?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처럼 'tight bipolarity', 즉 단단한 양극 체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성이 상당히 높고 서로 열려 있기 때문에 느슨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대칭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볼 때 미국의 국력이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제력을 보면 미국은 GDP가 21조 달러 정도인 반면, 중국은 14조 5,0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경제력이 압도적입니다. 군사력에서도 미국은 지금 연 7,000억 달러 정도의 국방비를 쓰는데, 중국은 2,400억 달러 정도로 두 국가의 국방비는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세계 패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군력에 달려 있는데, 미국은 현재 항공모함을 11척이나 갖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 3척, 카리브해에 1척, 바레인의 5함대, 지중해와 대서양의 6함대 그리고 요코스카 7함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바다를 커버하지요. 그런데 중국은 고작 2척밖에 없습니다. 요녕호는 청도에 있는 북해함대에 배치돼 있고, 산둥호는 아마 닝보 쪽에 있는 동해함대에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게다가 핵무기는 어떤가요? 미국은

6,000개가 넘지만 중국은 350개밖에 되지 않아요. 전략 폭격기 역시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을 연구하고 있지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군사력에서도 게임이 안 되는데 '왜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그렇게 부각시키느냐?'라는 것이죠. 미국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요즘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미중관계는 어떻게 갈 것인가

...

이런 상황에서 미중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 상태로 긴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타협을 통한 양자 지도 체제, 즉 G2 모델이죠. 중국과 미국의 대타협은 두 강대국의 협력을 의미하며, 두 강대국이 세계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미중관계의 스펙트럼을 보면, 미국이 중국에 관여하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합니다. 협력에서 좀 더 나아가면 경쟁이고 경쟁을 넘어서면 라이벌, 즉 적수가 되는 거죠. 라이벌을 넘어서면 적대관계가 됩니다. 미중관계는 지금 이 스펙트럼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안보 분야의 석학 하버드대학교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의 주장을 살펴봅시다.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는 2017년에 《예정된 전쟁: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을 미중관계에 적용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데,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지중해 주도권을 두고 벌어진 전쟁을 기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습니다. 스파르타는 내륙에 자리한 패권국이었고, 아테네는 작은 해양국가였습니다. 상업의 발달로 인한 갑작스러운 아테네의 부상은 이웃 국가인 스파르타에게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 책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국 아테네에 대한 위협과 공포가 두 국가를 전쟁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지금은 작고했지만 미시간대학의 오간스키(A.F.K. Organski) 교수는 세력전이론이라는 이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국력신장의 속도는 상당히 더디어지고 있는 반면에 도전국인 중국의 국력신장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럼 성장속도가 빨라지는 도전국 중국이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호랑이 꼬리를 밟는 순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단,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도전국 중국이 자기가 처한 국제적 위상에 대한 불만족도가 커야만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국력 신장을 미국이 인정해줄 경우, 중국의 불만족도가 적으니까 미국과 전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세력전이’라고 하는데, 국제정치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도 패권국 영국과 도전국 독일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고, 청일전쟁도 당시 지역 패권국인 청나라의 국

력은 쇠퇴하고 있었고 메이지유신 이후에 일본의 국력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런 ‘세력전이’ 과정에서 큰 전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 당헌당규와 중국 헌법에 패권을 반대하는 반패권 세력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 패권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의 위협을 아주 강조하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 패권을 구축한다면 언젠가는 결국 세계 패권으로 갈 것이므로,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갖는 것부터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회귀전략’이나 ‘인태전략(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갈등의 주요 쟁점

지정학적 갈등

2020년 7월 23일 마이클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닉슨 기념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신냉전의 선포'라고 봅니다. 마이클 폼페이오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를 통제하지 못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최초 발견자의 신고를 묵살하고 오히려 그걸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중국 공산당에 있는 셈이죠.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넘어 세계를 바꾸려 하고 있으니, 그전에 우리가 중국을 바꿔야 한다고 폼페이오는 말했습니다.

중국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 공산당을 타도해야 하지요. 그래서 반공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예전 냉전시대에는 소련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진영 간의 이념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다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대결을 이념 대결의 프레임으로 접근했으며, 이와 같은 미중대결을 신냉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냉전을 불러온 미중갈등의 가장 큰 이슈는 지정학적 충돌이에요. 지금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패권적 팽창을 시도할 테니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해협을 시작으로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막아야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추가한 쿼드 플러스^{Quad Plus}를 해야 한다, 나토식의 동맹체제를 이 지역에 만들어서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대결 구도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비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대만해협을 꼽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제임스 워너펠트 전 미국합동참모본부 차장과 마이클 모렐 전 CIA(미국중앙정보국) 부국장이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대만이 4일 이내에 넘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첫날은 전자전을 전개해서 대만의 모든 통신시설을 와해시키고, 둘째 날은 전투기 공습으로 대만을 초토화시키고, 셋째 날은 중국 해병대가 대만에 상륙하는 시나리오인데, 3~4일 정도면 그런 대규모 작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물리적으로 미국의 개입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을 걱정하는 이유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

의 주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 군사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의 반도체 수급에 엄청난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동중국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우선 일본과 중국이 충돌하겠지만, 만약에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문제로 중국이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미국은 일본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남중국해는 미국 입장에서는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군사행동을 하면 미국도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남중국해 분쟁까지는 국지적 전투가 될 수도 있지만 대만해협이나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갈등

...

다음으로 미중관계에서 골이 깊은 것은 경제적 갈등입니다. 먼저 무역 분쟁입니다. 미국은 미중 간의 무역적자가 매년 3,000억 달러 이상 커진 것은 중국이 가격 덤핑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용해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관행을 시정해야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

었죠. 이어서 통화패권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자국화폐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쓰기에 통화패권을 갖고 있죠. 중국은 달러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었죠. 요즘은 디지털 통화를 이용해 미국의 통화패권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대 무역대국 수출입 증감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20년				무역수지
		수출액	수출 증감률(%)	수입액	수입 증감률(%)	
	세계	17,385,792	-7.0	17,586,528	-7.4	-200,736
1	중국	2,598,024	5.4	2,060,258	-0.4	537,766
2	미국	1,431,584	-12.8	2,336,579	-6.5	-904,995
3	독일	1,380,647	-7.3	1,170,441	-5.2	210,206
4	네덜란드	674,678	-4.9	596,312	-6.2	78,366
5	일본	638,167	-9.6	631,195	-15.6	6,972
6	홍콩	552,773	3.2	573,785	-0.9	-21,012
7	한국	512,647	-5.4	467,645	-7.2	45,002
8	이탈리아	496,120	-6.9	422,875	-10.7	73,245
9	프랑스	488,372	-14.3	582,564	-10.5	-94,192
10	벨기에	419,892	-5.5	396,132	-7.1	23,760

(출처: 한국무역협회 K-stat)

그다음에 일대일로(一帶一路)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였던 실크로드를 현대판으로 다시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육상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진행되고 있습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일대일로'

니다. 육상 실크로드는 시안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거나, 페르시아만을 지나 지중해로 가거나,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를 거쳐 인도양으로 갑니다. 해상 실크로드는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거쳐 유럽으로 가거나 남중국해를 거쳐 남태평양으로 갑니다. 최근 북극해가 녹으니까 북극해 실크로드를 만들겠다고 하고 화웨이가 유명해지니까 디지털 실크로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는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백신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공공보건 실크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경제적 행위가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한 패권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정치적 행위로 보

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조치인 '탈동조화(Decoupling)'가 나온 겁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쓰지 말고 미국이 생산한 부품들을 넣어 전 세계 '공급 사슬망'에서 중국을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이나 일본 등 미국의 우방들한테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은근한 압박이 트럼프 정부 때 있었습니다.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 압박은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은 쌍순환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수 중심으로 가고 무역도 무절제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무역도 선택적으로 하고 투자도 선택적으로 받을 건데, 그렇게 하려면 과학기술이 필요하므로 과학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술패권 문제

...

그다음 문제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기술패권의 문제 또는 기술민족주의의 충돌 문제입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쟁의 문제입니다. 일본 경제지 중 하나인 <닛케이신문>은 매년 10대 첨단기술에 대해 어느 나라의 국제특허 건수가 많은지 통계를 집계합니다. 2018년 이후에는 인공지능, 5G, 드론 등의 10개 핵심기술이 포함되는데 그중 9개 분야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미국은 양자 컴퓨터(quantum computing)에서만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

지는 다 2등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한 국가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기초과학과 첨단과학에서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SCI 등재 논문 수를 비롯해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숫자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과 과학기술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가 안보에 주는 함의입니다. ‘왜 미국이 화웨이를 그렇게 때리고 있는냐’에 관해 프랑스 언론이 재미있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2013년에 화웨이 통신망에 침투하기 위해 ‘자이언트샷’이라는 비밀 공작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공작은 중국 인민해방군 동향을 파악하고 화웨이 5G 통신장비를 쓰는 이란과 파키스탄의 시스템에도 침투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화웨이 침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달리 보면, 화웨이 기술을 사용하여 미국의 정보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놀라운 건 영국이 자기들의 보안시스템을 화웨이에 부탁해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통해 동맹국의 군사기밀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빼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화웨이의 기술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분야의 국제표준 문제입니다. 국제표준이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예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사용하는 110볼트 전기 콘센트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20볼트가 표준이 되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220볼트를 쓰고 한국 역시 220볼트로 바꾸었습니다. 중국은 중국 표준2035라고 해서 2035년까지 핵심 기술들의 70%를 중국 기술로 국제표준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항법장치인 GPS는 미국 시스템인데, 지금은 바이두 시스템이라고 하는 중국 시스템이 30%를 점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국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G를 생각해보세요. 2G까지 퀄컴이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다가 5G로 접어들면서 화웨이가 치고 나오잖아요. 앞서 나가면 그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토니 블링컨^{Anthony John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이 제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IT기업에서 개발하는 홍채 인식, 안면 인식 기술 등이 홍콩, 위구르, 티베트 등에서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기술이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미중대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가치와 이념 충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정부처럼 중국 공산당 타도를 들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까요? 아마 3C 정책을 펼 것으로 봅니다. 3C는 ‘협력Cooperation’, ‘경쟁Competition’, ‘대결Confrontation’이예요. 어느 분야에서 협력할까요? 기후변화, 코로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북한핵, 이란핵에서는 협력을 할 것이고, 무역과 기술에서는 경쟁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두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결’은 가치와 지정학 분야에서 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때처럼 일방적인 반중 정서나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접근 자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올해 3월에 알래스카에서 첫 미중 고위급회담이 있었습니다. 양제츠

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언쟁을 벌였는데 미국 측에서 가치와 지정학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결을 제일 앞에다 놓은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경쟁도 대결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의 우려는 이와 같은 미중대결 구도인 것입니다.

외교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쟁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6·25전쟁 때 우리의 적군으로 참전했고, 사드 때도 자국의 이익만 취했으니 무조건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17세기 인조 때 조선이 뜨는 청나라를 가버이 보고 지는 명나라를 숭상하다가,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의 치욕, 즉 인조가 세 번 큰 절을 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뜨는 중국에 편승하는 게 낫지, 지는 미국에 배팅하지 말자는 주장을 특히 역사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에 휩쓸려 있었으니 ‘홀로 서기’하자고 말합니다. 그중에서 강경세력들은 우

리도 핵무장을 통해 중간세력 국가로 우뚝 솟아서 미중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가 되자고 합니다. 반면에 평화 애호적인 사람들은 이 기회에 우리가 아예 영세 중립국 선언을 해서 강대국 진영외교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방안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저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방안이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미중의 사이가 좋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클린턴과 장쩌민의 사이가 아주 좋았거든요.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장쩌민과 사이가 좋았고 클린턴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미중이 첨예한 대결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명민한 스마트 외교가 필요하다

...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초월외교^{Transcending Diplomacy}'입니다. 이렇게 미중이 싸우는 걸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으면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으로 들어가면 한국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일본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호주, 캐나다, 결국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다 어려워 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중국과는 경제교류를

많이 하는데, 신냉전이 오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지요.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최전선에 있는 나라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직면하게 되니까 그걸 막아야 합니다.

신냉전의 대두를 막으려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중견국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다 미국의 동맹입니다. 그럼 우리도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해야죠. 중견국가들과 서로 동맹을 유지할 때 미국은 우리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중견국가들이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큰 쟁점이 사이버 안보거든요. 그러면 사이버 안보에 관한 국제규범과 국제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동북아 방역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다른 중견국가들과 협력해서 WHO에 보완적인 국제방역 체제를 만들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는 '명민한 스마트 외교^{Smart Diplomacy}'를 해야 하고, 원칙에 기초한 용기와 결기 있는 외교를 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노력을 안과 밖에 널리 알리는 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강대국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우리의 자율성을 잃는 대신,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다자주의를 복원시키고 그 협력과 통합으로 열린 지역주의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의 거센 파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정인 이사장님께서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정치·경제·사회적 충격,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 세계질서에 관한 미래 시나리오 그리고 미중 대결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특히 이 전략적 선택지의 새로운 모색으로서 초월적 외교를 통한 새 질서 만들기 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특강을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미중 양국 사이에서 중립적 노선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같은 ‘안미경중’의 중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이므로 두 국가 간의 관계에 의해서 방향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요. 미중관계에서 이러한 중립적인 방향을 앞으로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혹 시나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문정인 교수 그건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겠죠. 저는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외교의 특징화에 관해 동의하지 않아요.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은 우리 전체 수출액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우리의 무역대상국입니다. 한미 외교는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중요합니다. 한중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우리 전체 수출액의 약 25%를 차지하니까 경제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서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바뀌어가는 과정

에서 중국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군비 통제를 하고 신뢰 구축을 하는 데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역할 분담론적 접근은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창의적인 외교를 해야 합니다. 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쿼드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는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에게 쿼드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요청한 적 없는데 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미국에 기울어지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미중대결 구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중대결 구도를 가급적이면 지연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위기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가 볼 때 선부른 선택은 결코 우리의 실존적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미국 편에 있다고 선언하고 미국과 같이 가라.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시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올 손익계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중관계를 개선시켜주는 게 아니고,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질문 2 한일관계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미중 문제보다 한일관계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는데요. 몇 해 전부터 한일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황입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서로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에 이어 군사적인 협정관계에서도 최악으로 치닫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친화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정인 교수 맞아요, 100% 동의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초월적 외교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에요. 한국 혼자서는 안 되고 일본 혼자서도 안 되지만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면 가능해요. 따라서 일본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협력이 안 되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와 얽힌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본의 입장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이 합의를 한 위안부 합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국교 수립에 관한 기본조약에서 다 해결이 됐으니 그걸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의 해결책을 갖고 우리에게 와서 보여줘라. 그럼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일본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해법이 쉽지 않아요. 징용공 문제는 1심, 2심에서는 피고인 일본 기업들, 즉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승소를 했지만 3심 대법원에서는 패소

를 했던 말이에요. 그럼 패소 결정을 따르는 게 당연한 법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아베 내각에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위반되는 것이니 배상금 주지 말라고 하면서 안 주고 있던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에 재판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정치적 타결이 가능하겠지만, 1심부터 참여를 했는데 승소를 하니깐 가만히 있다가 3심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오자 ‘징용공 배상금을 못 준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 도움을 많이 받은 국내 기업체들로부터 성금을 받고, 또 국민성금도 모으고 정부도 예산 배정을 해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한편 일본 피고인 기업들이 배상금을 징용공 피의자들에게 지불하면 이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일본기업에 보전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청와대가 알아서 해결하라는데 독재정부도 아니고 지금 청와대가 무슨 힘이 있나요?

여기에는 또 하나 법률적인 미비점이 있어요. 국제법을 보면 식민지를 운영했던 국가들은 ‘법정의 친구Amicus Curiae’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어요.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마찰이 있을 때, 사전 조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국민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포로수용소에 들어가서 인간적 학대를 많이 당했던 일로 일본에 다시 배상청

구를 하겠다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이런 소송이 접수되었는데 국제 법상 타당하냐고 미 국무부에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미 국무부는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전부 다 타결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는 그 소송을 각하 시켜요. 대부분 식민지를 운영했던 국가에서 배상·보상 문제가 나올 때 행정부와 사법부가 협의하기 위해 만든 법조항인데, 한국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에 우리의 사정을 누차 설명했어요. 일본도 좀 융통성 있게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 문제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 11번, 대면회담 4번을 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은 역사문제는 시간이 걸리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니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자는 거예요.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한일 간의 협력 사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북핵문제 등과 중국의 부상이라든가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협력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베 총리는 역사문제가 해결돼야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안을 거절했어요. 지금 일본의 험한 세력들과 한국의 반일 세력들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일관계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질문 3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할까요?

저는 북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대립 구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주의자들이 남북한이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핵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정인 교수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질문을 해볼게요.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가졌을까요? 우리는 보통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문헌을 보면 미국의 핵위협에 대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갖는다고 해요. 나는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25때 미군 폭격에 의해서 평양이 완전 초토화되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 과거 동독의 드레스덴 지역인데, 평양은 드레스덴 지역보다 더 심한 폭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미국이 결국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해올 거라는 공포가 있어요. 평양의 지하철을 지하 100미터나 내려가서 만든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는 1991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950개나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는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었

습니다. 미 본토에서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고, 괌에서도 전략 폭격기를 몰고 가면 세 시간 만에 공격할 수 있고, 7함대의 핵추진 잠수함에서도 핵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미국과 남한이 언제라도 자신들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핵무기를 가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북에서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은 절대 핵을 가진 한국을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핵을 갖게 되면 한국이 미국 말을 들을 리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핵이라고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우리가 자기들을 향해 쓸 수도 있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핵전력 보강과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아주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독자 개발해야 된다고나 미국의 전략핵 또는 철수한 미국 전략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된다는 주장은 다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한미연합 전력의 재래식 전력을 계속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확장 억지력을 통해서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받으면서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기사를 쓰는데요. 우리가 군사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쓰게 되면 그날부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중

단돼요. 국제원자력기구에 ‘원자력 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이라는 산하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우라늄을 공급하는 것도 차단시켜요. 원자력 산업이 완전 초토화돼요. 그럼 한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핵무장하려고 하는 그 순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요. 지금의 북한과 이란처럼 되는 거죠. 북한이 당하는 것처럼 모든 수준에 있어서 제재가 가해집니다. 지금 북한은 정제유가 1년에 2백만 배럴밖에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 한국의 하루 정제유 사용량이 2백만 배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몰래 개발하려고 한다면 ‘지금의 북한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사회자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사장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문정인 교수

저는 요즘에 세종연구소 말고도 국제 NGO 단체인 ‘핵확산 방지 및 핵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도자 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호주 외무장관을 지냈던 가렛 에반스라는 사람이고요. 거기서 20대 인턴들을 쓰고 있는데 너무나 일을 잘해요. 솔직히 우리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

다 더 잘해요. 주어진 작업들을 정말 똑 부러지게 잘 만들어 놓아요. 나이든 사람들은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 줄도 사용할 줄도 잘 모르잖아요. 정말 놀랐어요.

20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많지만 저는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 대학에서 가르칠 때보다 최근에 와서 더 많이 일을 같이 해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기뻐 만하다, 베풀어 만하다고 느껴요. 이제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같은 선배들의 역할이고 대학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종연구소에서 인턴들을 뽑을 때 젊은 20대를 많이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인턴 모집 공지가 떴을 때는 꼭 지원하세요.

우리 20대들이 정말 능력이 탁월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주인이고 우리는 곧 지나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과 평화통일 전략

평화통일의 여건이 형성되다

강연자 **홍현익** 洪鉉翼

• 국립외교원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외교학 석사학위를,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경기연구원 이사, 미 듀크대학교 객원교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변영분과 위원을 거쳐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정책자문위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수석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되었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남북 베트남, 남북 예멘, 동서 독일 그리고 남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이 중 한반도를 제외한 세 국가는 모두 통일되었습니다. 물론 중국 본토와 대만과 같이 여전히 논의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 본토와 대만을 단일국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두 나라는 ‘삼통三通’이라고 해서 우편과 통신 등의 교류가 활발하고, 교류 및 교역 또한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엄청난 분단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루 빨리 통일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상황과 시대정신이 통일의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

변국들을 잘 설득하며 협력하여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교량적인 위치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를 보면,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 민족 간 반목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겪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편익에 의해 한반도의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 환경 요인이 한반도 분단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외부 요인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은 한반도의 통일을 점점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전략과 이들의 이익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그들이 우리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살펴보기

...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상당히 좋은 여건

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심각한 체제위기와 3대 세습에 따른 체제적인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심각한 체제위기가 온 것은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국내 경제 분야에 있어 생산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사람이 일단 생존을 해야 하는데 식량도 매우 부족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람들이 굶어죽는 상황은 아니지만 영양 실조에 걸린 아동들이 많고 하루 세끼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북한 내 전기 생산의 부족은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상황과 연결되고, 결국 공장들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나마 공급되는 전기도 일정한 전압을 가진 양질의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첨단 미세 공정이 필요한 제품의 생산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 시설의 부족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양에서 나진까지 가려면 이틀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때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고향에 가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교통·통신 시설의 미비, 물자 운송 수단의 부족은 결국 북한의 더딘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원자재 역시 북한 내에서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북한이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북한에 지하자원이 많은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자원 매장량은 남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희토류 매장량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고 채굴 능력이 부족해서 지하자원을 캐내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경제체제로 인해서 원자재 수출마저도 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는 길이 막히는 바람에 석탄을 국내 화력발전소에 이용해 오히려 북한의 전력 생산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처럼 북한은 공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특히 부족한 것은 석유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석유를 전량 수입해서 석유화학공업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못지않게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바로 반도체, IT 산업,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공업 등에서 세계 시장에 통하는 우수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산업용으로 쓸 석유를 거의 수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국내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자본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북한은 매년 수출입에서 10억 달러 이상 적자입니다. 2018년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제체제 이후

수출을 못하니 적자가 오히려 더 늘어서 지금은 연간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북한은 어떻게 외화를 벌까요? 북한은 해외에 많은 노동자들을 보내 소위 외화벌이를 했지요.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하에서 해외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귀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3대 세습이 있습니다. 과거 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를 보면 권력이 세습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3대에 걸쳐 세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 자체와도 어긋나는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세계화와 정보화의 심화 역시 아주 중요한 통일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체제위기를 정권 차원에서 깨닫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핵개발에서 찾았습니다. 1980년대에 준비를 해서 1990년대 초부터는 비밀리에 적극적으로 핵개발에 나섰습니다. 2017년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생산한 플루토늄을 사용해 약 20여 개의 핵탄두를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여 개의 핵탄두는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기이고 북한이 우리에게 큰소리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안보와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권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 남북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하면 한 시간에 최소 만 발 이상의 포탄이 날아온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인권 개선

...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우리로서는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분단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은 결국 남북한 간에 하는 것인데 2020년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의하면, 남북한 간의 국민총소득^{GNI}은 어느새 5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핵개발과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각종 제재를 받는 바람에 남북한 격차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남북한 격차가 43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새 50배가 넘었습니다. 남한이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통일을 가는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하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선진국에 준하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상황이 북한

내에 공유 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만큼 외교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과 의도, 상대적인 국력을 잘 파악해서 지혜롭게 가야 하겠지만 어쨌든 남북관계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접촉을 넓혀가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첨단무기를 개발하든가 수입하면 북한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북한이 내심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많은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동포라는 것을 생각하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북한을 궁지로 몰아 체제안보 위기를 느끼게 되면 오히려 인권을 더 탄압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직접 만나서 “우리 같은 동포인데 주민들을 이렇게 탄압하지 마라”라고 설득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제협력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과거에 서독이 동독에게 했던 방식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부분적이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든 시대 한반도 주변정세

회복되는 미국의 리더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다자주의를 복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를 중심으로 미국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외정책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최강대국인 미국이 너무 자국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미국의 동맹국까지도 경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안보와 안전만을 중시한 정책을 강조한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방역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협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와 달리 기후변화, 핵비확산, 대량살상무기 등의 글로벌 이슈 해

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전략 기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측면은 미중갈등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중국 때리기를 어느 정도 계속하고 있으므로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8년 무렵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초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방국과의 동맹을 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국에 참가하고 있는 소위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4개의 강국들이 힘을 합쳐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와 아주 가깝습니다. 또한 인도와 중국은 브릭스^{BRICS} 정상회담도 같이 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에도 가입했습니다. 인도는 이처럼 중국·러시아와 협력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쿼드가 반드시 중국을 완전히 견제하고 봉쇄하는 반중 동맹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책임을 중국에게 떠넘기며, 본인의

재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국 때리기’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커지고,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하여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항상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과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기후변화, 글로벌 팬데믹, 대량살상무기 및 핵비확산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과 협력하고 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신들의 강점을 가지고 미국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외화도 많고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유럽, 또는 브릭스나 상하이 협력기구와 같은 협의체를 지렛대로 이용하면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의 공세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약간 회피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은 ‘시간은 결국 중국 편’이라는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 미국에 대한 반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중경쟁과 한중관계

...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은 안보측면에서 우방국가들과의 우

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 못지 않게 경제적 이해관계도 면밀히 고려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산업연구원의 2021년 5월 중국산업경제 브리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한국은 중국과 무역을 통해 매년 약 450억 달러 상당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게 중요한 무역 국가인 중국은 경제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인 호혜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는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역과 금융, 환율, 화폐 및 기축통화 문제 등과 더불어 중국을 배제하는 ‘국제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런 네트워크에 미국은 한국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분야의 이슈 외에도 대만문제, 홍콩 보안법 문제도 있고, 남·동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 한편, 미국은 국제사회에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탄압 이슈를 언급하며, 미국 중심의 우방국 간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평화체제

평화의 봄을 가져온 평창 동계올림픽

다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사실 한중관계도 어려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초기에는 북미 간에 아주 엄청난 압박과 대결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북한이 먼저 고개 숙이고 나오지 않으면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8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기자회견 중 “북한이 미국을 더 위협하면 북한은 전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경고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의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흐르는 해였습니다.



판문점선언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2018. 4. 27.) (사진 출처: 연합뉴스)

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72차 UN총회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자국이나 동맹국을 지켜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2017년 한반도는 예측불허 상황 하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간의 소모적인 대립을 막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촉구했고, 남북 대립보다는 협력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 노력이 결국 2018년에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가져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고 IOC도 협력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일종의 포용정책이 성공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서울에 왔고 당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을 포함한 대통령특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 4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 그어진 남북 분단선을 잠시 넘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는 상징적인 장면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6월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50여 배입니다. 한미 간의 경제력 격차가 약 13배 정도 된다고 하면, 미국과 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는 600배가 넘습니다. 엄청난 차이이고 군사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20여 개 내외이고 미국은 10,000개가 넘습니다. 5,000개는 잠시 탄두를 분리해냈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5,000개가 넘습니다. 그것만 계산해도 250배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2018. 6. 12.) (사진 출처: 연합뉴스)

전략 폭격기,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각종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상대적으로 북한에게 우호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 1항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약속
- 2항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 3항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 4항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 발굴 및 송환 추진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제1항과 제2항이 북한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며, 제3항과 제4항이 미국의 입장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항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이며, 제2항은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의 상황을 미국이 고려해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3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바라는 바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의 내용은 미국이 북한에게 바라는 것으로 미군 유해송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합의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순조롭게 지켜졌다면 북핵문제는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그렇게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와 쟁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등 한국전쟁에 참전한 최소 4개국이 합의문을 만들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보장기구를 만들게 되면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협상을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논의하다 보면 몇 년이 지날 수도 있습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군중들에게 화답하는 남북 정상(2018. 9. 19.) (사진 출처: 연합뉴스)

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일단 정치적으로 어떤 선언을 해두자, 즉 평화협정으로 나간다는 것을 북한이 믿을 수 있도록 종전선언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가을 평양을 방문해서 공동선언을 하고 남북 간에 군사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군사합의서 체결을 통해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상호 간에 소모적인 군사적 대립을 막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계획도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힘겹게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북핵문제 논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

동창리 엔진 실험장을 영구 폐기, 영변의 핵시설 폐기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영변의 핵시설 비중은 북한의 핵시설에서 최소 60%, 많게는 80%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구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조치가 언급되었습니다. 미국의 상호조치라는 것은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에 협력하고 연락 대표부를 설치하거나 혹은 종전 선언을 하는 등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했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의 의미로 주한미군, 한미동맹, 그리고 유엔사령부 등과는 특별히 연계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컸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내용으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 미국의 상호조치로 유엔 안보리제재의 일부 해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영변 핵시설의 전면 파기와 해체에 더해 추가적인 비핵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불응하며 결국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기대와 달리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결렬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많은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하지 못한 제안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은 김정은 위원장을 자극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를 느꼈을 것이라 봅니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타협이 결렬된 것을 당연한 결과로 여기고, 미국 내에서 자신의 지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북핵문제는 현재까지도 진전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북미관계는 어떻게 갈 것인가

북핵 전망 4가지 시나리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발휘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이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8년 제1차 북미정상회담,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2019년 10월 북미 간의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회담에서조차 북한과 미국 모두 특별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 내용 중 일부를 이행했기 때문에 미국이 최소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북한이 바라는, 소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국 북미 간 회담 성사의 관건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차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북미관계를 보면서 어떻게 북미문제가 진전될지 네 가지 시나리오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미중관계와 북미관계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미중관계도 개선되고 북미관계도 개선될 때 비로소 북핵문제 해결이 진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관계가 상당히 경색되고 갈등과 대립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중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북핵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나쁜 상황은 미중관계와 북미관계가 모두 나쁜 상황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최악의 경우로 남북관계, 미중관계가 모두 갈등 국면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핵을 보유한 북한과 전면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미중 간의 대리전으로서 남북한 간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핵과 관련된 것으로 북핵문제의 해결,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망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사례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는 약 200여 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우크라이나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러시아로 전부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리아반도를 러시아의 일부로 병합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 상황을 방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할 당시 우크라이나의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보면, 북한 역시 핵 포기에 대한 체제 불안정 혹은 체제 유지에 대한 의구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미루어볼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리비아 사례를 통한 교훈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리비아 정보부와 영국 정보부 그리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3자가 1년 이상의 협상을 통해서 리비아의 체제를 보장해준다는 조건하에 리비아의 대량 살상무기 포기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를 방문해 보니, 리비아에는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미사일이 있었지만, 미사일은 다 파기해서 미국으로 넘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년 뒤 미국이 리비아와 관계정상화를 했지만 그 이후 리비아에 내전이 발생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NATO의 개입은 결국 카다피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리비아의 사례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 핵을 포기하면 내전이 발생하고, 결국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

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 사례를 통한 전망으로 이 사례의 교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사례를 통해 북한과의 협상을 도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바이든은 의회에서 외교위원장을 역임했고 외교 부분에 상당히 정통한 정치인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도 지지했습니다. 오바마는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에게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일임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쿠바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기여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북한과 타협을 하지 않았지만 이란과는 1년 이상의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 활동을 정지하고 유예한다면 대 이란 제재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독일까지 포함한 6개국과 이란과의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성사시킨 사람이 바로 바이든입니다.

이란은 평화적 방식의 핵 사용을 제외하고 핵무기 제조 등과 관련된 분야는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유예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이란과의 외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란과의 핵합의는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결국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후, 이란 핵합의를 전면 파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협상 파기는 참여 당사국(중국·러

시아·영국·프랑스·독일) 내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참여 당사국인 5개국은 이란이 핵폐기와 이에 수반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파기할 명분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역시 이란은 핵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이 참여 대상국과 IAEA 사무총장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란과의 핵협상을 단독으로 파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에 다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이란과 협력하는 나라는 미국이 제재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가동했습니다.

이란의 핵협상 파기 사례를 보면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협상 카드가 핵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할 경우 북한 정권이 유지될 것인지, 혹은 이란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도모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불신의 벽이 깨져야

...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미국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북한 또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협상에 나오더라도 미국을 상당히 불신하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제재 일부라도 완화하고 종전선언이라든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모종의 조치들을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발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은 1단계 합의 과정에서는 배제시키려 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전면 폐기를 언급하며, 이를 우선적으로 폐기하라고 요구하면 미국과 북한의 합의는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인내심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고, 재선이 안 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대통령 임기 초부터 북한과의 핵문제 협상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단계 합의 내용으로 이란의 경우와 같이 핵 생산 및 무기제조 등의 활동을 전면 동결,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단계적인 핵폐기 과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단계적 핵폐기 과정에 동의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안보리제재 완화,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 북한의 요구 또한 수용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미국이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비핵화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신뢰 형성이 가능할 것을 보여주길 원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와 통일전략

적극적인 남북경협부터 시작해야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외교전략과 통일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분단비용을 최소화하며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독일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동독 측 내부에서 민주적인 변혁이 시작되었고, 민주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의 결의에 따라 서독 연방에 편입을 원했으며 서독 의회의 승인으로 독일은 평화통일을 달성했습니다. 서독인들은 독일 통일 과정에 주변국의 참여와 개입도 극복했습니다. 한편, 동독과 서독의 소득격차를 맞추는 과정에서 많은 통일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사례에 적

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통일로 가기 전에 일단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분단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가능하다면 남북 간에 협력을 통해 호혜적으로 이득을 도모하며 통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에서도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한민국이 대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0년 북한이 남한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합의한 바와 같이 상호 비방하고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남북 간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 당국도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휴전선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대한민국 주민들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행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협하면서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옳은 방향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북한보다 50배나 앞서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보다는 협력이라는 단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 역시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으로 의료와 방역 분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보건의료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지만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 2020년 4월 최북단 제진역이 복구 완료되었으며, 제진역에서 남강릉역까지는 복구 중에 있습니다. 남한 구간의 철도가 북한까지 조속히 연결되도록 남북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유엔안보리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 관광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준비하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대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호혜적이고 우호적인 한미동맹 발전

...

한미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외전략의 주요 이슈

입니다. 국제평화와 공영을 향한 전방위 협력을 대외전략의 기조로 삼아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면서 한미동맹이 반중 동맹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북핵문제는 미국의 우선순위 이슈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당당하게 설득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6·25 전쟁 이후 한미동맹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상당히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밀접한 만큼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기조가 중국 견제에 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동참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부담을 조금 덜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서 미국 부담을 줄여주고 한국과 미국이 독립적인 지휘체제를 갖추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방지도자들의 지휘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략, 전술, 작전계획 등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고 훈련도 해야 합니다.

일본은 남북자 문제를 앞세워서 남북 간 호혜적 협력이나 북핵문제 해결에 별로 협력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이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슬기로운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대한민국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여 석유와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수출량의 약 30%가 중국과 홍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협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방공 식별 구역 침범 등이 발생할 때는 우리 주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한중 간 전략대화나 국방교류도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중국과 북한이 매우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중국·북한 3자 호혜적 경험 추진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세안·중남미 등으로 무역시장을 다변화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중견국 리더십 확보 추구

...

K방역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향상되었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국제적 위상을 활용하고 방역과 의료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협력자인 중

국과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국가가 협력관계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다자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믹타(MIKTA, 한국의 주도로 2013년 9월 출범한 중견국 협의체,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의 5개국 참여)와 같은 중진국들 모임, 한미일 협력, 한중일 협력, 남북러 협력, 남북중 협력, 남북중러 협력 등등에 적극 나서면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의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외전략의 중추는 한미동맹이고 중국과의 무역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층적인 안보전략도 중요합니다. 일단 한미동맹을 국가 안보의 중요한 안보협력 파트너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주변 4강이라고 하는 국가들과의 양자 간 협력도 안보에 도움이 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미동맹과 양자 간 안보협력을 함께 추진하고, 가능하다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을 구축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물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맺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북핵문제 해결이 진전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어려웠던 이유는 북한은 물론, 중국 역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한미동맹, 미일동맹부터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견제와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

문에 중국도 과거와는 달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취하는 것이 자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물론이고 미국·일본·중국도 동참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외교가 필요합니다.

안보협력이 당장 힘들다면 환경 협력이라든지 방역, 위생, 해적문제, 인신매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원자력 안전과 같은 동북아의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쉽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협력을 도모하면서 결국 다자안보협력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유지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지금의 휴전선 이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킴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의 평화통일에 동의할 수 있는 국제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독일 통일의 교훈

...

우리가 전쟁을 통해 통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도 중요하지만 평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평화통일 이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단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1969년에 진보정당인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펼쳐 통일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소련을 방문하여 화해하고

폴란드를 방문하여 영토불안을 해소시켜주었으며 동서독 간 정상회담, 기본조약, 유엔가입 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엔에 가입하고 기본조약을 맺은 다음에 서독의 진보·보수 정치인들이 서로 암묵적인 동의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통일을 앞세우지 말자, 동서독 간의 경제 격차가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통일을 자꾸 앞세우면 동독이 협력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동독 입장에서는 협력하다가 흡수통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독을 평화통일의 길로 동참하게 하려면 부담을 없애주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말은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 분단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지요. 당시 보수·진보 정치인들이 내심으로 합의를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면 대북정책에 있어서 여야 모두 인기를 위해 대북정책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지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야당도 대북문제를 정치적 투쟁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평화를 지키고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독은 분단비용 최소화를 앞세우면서도 보수·진보 정권이 교체해가면서 점진적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보정권은 물론이고 보수정권조차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달성한 정부가 콜 총리 정부인데 그는 보수정당인 기민당 총재입니다. 헬무트 콜 총리가 서독의 한 주가 동독에 경제지원을 하는 것을 연방은행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해주라고 할 정도로 화해협력 기조를 지속했

지요. 그러니까 브란트 총리가 했던 동방정책의 기초를 서독의 마지막 정부의 콜 총리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면서 결국 통일을 했다는 것이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

마지막으로 통일비용의 문제입니다. 독일이 평화통일을 달성할 당시 동독과 서독의 일인당 소득 격차가 3배가량 낮았는데 그것을 30년 동안 80% 수준까지 향상시켰습니다.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따져보면, 동독에 우리 돈으로 130조 원 정도를 30년 정도 지원해줬는데요. 독일은 지금도 10~20년을 더 지원해서 동독 주민들의 소득이 서독 주민의 90%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진짜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동서독 간의 인구 비율은 4대 1이었는데 남북한은 2대 1입니다. 서독 주민 4명이 동독 주민 1명을 책임졌지만 우리는 남한 주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책임져야 하고 1인당 소득도 27배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동서독보다 훨씬 큼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비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급변사태를 통해서 갑자기 통일을 달성하게 되면 30년간 2,50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분의 1을 30년간 매년 북한 지역에

투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남북 간 화해협력기조가 형성되어 경제협력을 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업자인 북한 주민들을 고용하여 북한의 산업을 일으키고 소득을 향상시켜 매년 5~10%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평화통일이 달성된다고 하면 30년간 400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평화통일을 달성하면 급변사태로 통일이 되는 것보다 2,100조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주변국 반대 없이 오히려 지지받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호혜적인 경험을 증진시키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제와 전망

세계 패권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가?

강연자 **조성렬** 趙成烈

• 주 오사카 총영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자문연구위원, 일본 도쿄대학, 게이오대학,
중국 외교학원 방문학자,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백산서당, 2021), 《닉슨 행정부 시기
주한미군 감축협상》(국립외교원, 2020),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
(백산서당, 2019) 등이 있다.



* 이 글은 총영사로 부임하기 전에 작성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미중 전략경쟁

2021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앵커리지에서 미국
과 중국의 외교안보수장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 왕이 王毅 중국 외교
부장,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 등이 만나는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
과 양제츠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미
중 정책당국자들 간의 갈등이 드러난 모습은 세계적으로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을 만나면 화제의 중심이 시종일관 ‘중국’이
라고 합니다. 미국의 관심이 중국에 쏠려있다는 뜻이지요. 어떻게 보
면 한반도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전문
가들 또한 오로지 미국에만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

역시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미국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늘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과정 속에서 재편된 새로운 질서에 끼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지를 받는 것인지 혹은 걸림돌이 될 것인지 미래의 한반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첫 번째로 ‘신냉전 회귀’ 가능성입니다. 언론은 현재 미중관계를 ‘신냉전’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7일 한국과 미국의 2+2 전략회담을 위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Lloyd Austin} 국

2021년 3월 17일에 열린 2+2 한미 전략회담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 (사진 출처: 연합뉴스)



방장관이 도쿄를 거쳐서 서울에 왔습니다. 이때, 한미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 세계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축’으로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성명 발표 직후인 3월 22일, 베이징으로 부임하는 북한 대사가 쑹타오^{宋塔奥}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가 전달되고 쑹타오도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신냉전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 구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 간에 오랜 경쟁이 있었습니다. 즉, 미국의 자유주의 질서와 소련의 사회주의 질서 간의 패권경쟁이었죠. 1945년 이전까지, 즉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대해 미국과 소련이 힘을 합쳐 파시즘 종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 민족은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지만, 이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민족이 분단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1948년에 남한과 북한이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서 분단이 굳어졌고 이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 시대, 미국과 소련은 직접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동맹 세력을 유지·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결합한 남방 삼각관계와 북한, 소련, 중국 등이 결합한 북방 삼각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고 있지만 한국은 러시아와도 수교를 맺고 있고 중국과도 수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북방 삼각관계는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를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평화 프로세스의 또 다른 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향후 30년 세계 패권의 향방은

...

신냉전은 냉전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전은 이데올로기 대립을 특징으로 하며 양자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신냉전체제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를 패권경쟁으로 볼 것인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말은 패권경쟁이 아니라는 뜻이고 세력전의 과도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력전이라고 한다면 미국 질서에 중국이 도전하거나 배신을 해야 합니다. 배신을 하려면 중국이 독자

적인 질서를 구축해야겠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고 부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orld Bank) 등으로 이루어진 경제 금융체제는 미국이 만들고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맥도널드, 코카콜라 등 미국식 문화도 마찬가지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가 존재합니다. 중국은 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뻗치며 일대일로를 통해 그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구도입니다. ‘뉴노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중국이 주장하듯이 신형대국관계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소련 간의 양극체제(G2)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국이 소련에 비견될 정도로 성장해서 미국과 G2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소련은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군사적인 면에서 표준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모스크바의 표준이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베이징 컨센서스’는 미국의 것을 모방했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틀 속에서 미중이 서로 ‘양적인 경쟁’을 하는 것을 전략적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무극(G-Zero)의 시대라는 표현도 있듯이,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주도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2050년까지 미국이 가장 강

한 나라일 확률은 높지만 현재 미국은 상대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나머지 나라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브라질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냉전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과하며 패권경쟁도 아닙니다. 아직은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여러 나라의 도전에 의해서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

미국의 패권 도전 국가 압박 정책

패권경쟁은 아니지만 패권에 도전하는 양태를 볼 수 있는데, GDP 4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가 미국 GDP의 40%를 넘으면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도전을 좌절시켰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소련입니다. 1970년 소련이 미국 GDP의 40%를 넘어서자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1972년 2월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상하이 공동성명'에 함께 서명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적대관계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을 첨단 군비경쟁으로 밀어 넣었지요. '전략방위구상'(SDI,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제안된 미국의 전략방어체계, 별칭은 스타워즈)을 통해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는 군비경쟁으로 계속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소

련은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소련의 해체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1980년대 후반 동구권의 해체와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일본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 GDP의 38%까지 따라잡았습니다. 미국은 과거 소련과의 경험을 토대로 일본과 플라자 합의(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G5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을 결정한 회의)를 체결하면서 엔화 가치를 올리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일본 제품의 가격 상승과 함께 일본 제품들이 세계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제 쇠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을 지나 2011년에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잃어버린 30년'에 봉착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2010년부터 자리매김하였고 미국 GDP의 40%를 돌파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신경이 온통 증동에 쏠려있었고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이루어졌고 미국은 중국의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전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2008년 9월 세계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에 의해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고 내부 수습에 급급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GDP는 미국의 70%까지 쫓아왔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

《중국의 미래》의 저자인 데이비드 샴보 David Shambaugh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내부의 대응세력마저 몰락하면서 중국의 민주화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신권위주의'에서 '경성 권위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성 권위주의, 준민주주의'로 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시진핑 체제는 경성 권위주의 체제로 후퇴하는 중입니다.

존 J. 미어샤이머 John J. Mearsheimer 교수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중국이 아직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는 어렵다며,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막기 위해 고유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물과 석유가 부족한 상태의 국가임을 감안하여 석유가격을 높임으로써 압박을 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성장을 계속하자, 2014년 개정판에서는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중경쟁을 먼저 민감하게 생각한 것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과 WTO 가입 승인이 그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패착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있을 때 중국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추월을 허용했습니다. 이후에도 중국의 고속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상황이 불거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당하고 있었던 미국이 트

럼프 행정부 때부터 반격을 감행했습니다. 무역전쟁을 통해 고율관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부분에서 트럼프 지우기를 하고 있지만 대중국 정책만큼은 그 기초를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또한 화웨이, 텐센트와 같은 IT 계통의 중국기업들에 규제를 가하고 있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제출했고 바로 같은 해 11월 미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비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현상변경국가^{revisionist power}로 규정하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도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인권문제와 같은 내정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장 위구르, 홍콩 민주화 억압 문제, 대만에 대한 강압정책 등을 비난하고 있고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몽’을 내세우며 야심을 표출하다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경제적 명분을 바탕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를 명명했고 2035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실현을 계획 중입니다. 구매력 평가지수에서 미국을 앞지르는 한편, 2050년에는 명목 화폐지

수에서도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력을 확대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기준을 삼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표입니다. 경제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강대국의 밑바탕은 경제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 군사력, 문화 부분 등을 따지면 중국이 넘버원이 되는 것은 2050년 이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대로 가면 2050년이 미중 사이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면서 그 야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49년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1979년 자본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다. 1989년 소련 해체 당시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고, 2009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만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2049년에는 중국이 세계 제일인 된다는 것이 ‘중국몽’입니다.

한편, 2009년 다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한국은 이례적으로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주변국들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중국은 도련선 전략^{島連線戰略, Islands Chain Strategy}을 통해 2020년까지 일본의 오키나와-대만-필리핀 안쪽 등 동남중국해를 중국의 체해권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동아시아 해양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2050년까지는 괌-사이판-과누아누기니 근해까지 연결하는 제2도련선을 설치, 서태평양의 체해권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 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 Strategy}’으로도 불리는 해양 패권 전략으로 동남아시아

아, 아프리카에 걸쳐 거점 항구를 장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양 실크로드는 군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대륙 국가에서 탈피하여 본격적으로 해양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속의 북한의 국가전략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국가의 목표로 세우고 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핵 군사강국의 꿈을 이루려 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강국이라는 목표를 같이 붙입니다. '경제와 핵 무력의 병진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진노선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핵 군사강국의 목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내세운 경제강국의 목표를 실현하려 했던 과도기 노선입니다.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 총력노선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 '화성 14형'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습니다. 수소폭탄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에서 수소폭탄은 6개국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만약 북한의 주장을 믿는다면, 북한도 이에 포함됩니다. 원자폭탄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했고, 이듬해인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4차례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도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핵 카드를 이용하여 북미관계 개선, 북중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입니다.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중앙정부가 통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를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2021년 1월 11일에 열린 북한 8차 당대회장 모습 (사진 출처: 연합뉴스)



8차 당대회를 통해 기존 경제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경제개발 노선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당대회에서 밝힌 정책에서 우려되는 것은 핵문제에서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점입니다. 초대형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데 이어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개발하여 전술무기화를 시켰습니다.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어떤 미국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적대관계 해소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미관계를 유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북한은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북한의 7차 당대회와 이번 8차 당대회를 비교해보면, ‘선제 핵 불사용’에서 ‘핵 불남용’으로 바뀌었고 중국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배신자’에서 ‘하나의 운명체’로 인식을 전환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라고 이야기했던 데서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로 통일에 대한 기대를 많이 접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유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남, 대미관계를 풀지 않고서는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발도상국의 길을 가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가능성(방법)을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난비행’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량국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추가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경착륙’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적인 모순(가뭄, 장마, 폭동 등)으로 인한 하드 랜딩입니다. 세 번째 ‘연착륙’입니다. 핵 없는 개도국의 길을 가면서 자유주의 정상국가 또는 사회주의 정상국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착륙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경착륙이든 난비행이든 추가적인 대비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의 직접적 위협과 잠재적 위협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단순히 한국과 미국, 북한, 중국이 한국전쟁의 법적 종식을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생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 힘의 관계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정세는 '뉴노멀'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위협이 있는데 하나는 북한의 직접적 위협, 또 하나는 주변국들로부터 오는 잠재적 위협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직접적 위협을 해소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북한 위협의 핵심은 핵문제입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경제개발을 하고 싶

어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국가는 정말 많습니다. 북한을 핵이 없는 개발도상국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GFP}의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의하면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 5위는 일본, 6위는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28위인데, 이것은 핵무기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해 핵우산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핵무기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의 핵무기 위협 또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방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은 핵이 없지만, 얼마 전 개편된 일본의 교과서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독도를 무력으로 침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미국이 아시아에서 손을 뗀다면 일본은 제일 먼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이미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꼭 필요합니다. 최소한 향후 30년은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후 어떻게 할지는 우리 후손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미중 전략경쟁 속 쿼드에 대한 입장

...

중국은 2020년 기준 한국 수출액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보복 이후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로 옮겨갔으나 지정학적 이유 때문인지 중국의 비중은 줄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도 수출이 줄었으나 오히려 중국과의 교류는 늘어났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수출액을 다 합쳐도 25.6%에 불과합니다.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해관계가 맞아서 서로 협력한다는 이야기이지 한미동맹처럼 목숨을 같이 바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통일이 좌절된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우리 편보다 북한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기초로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s) 관계'를 맺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바퀴살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전선에 참여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 방문 당시 정상 간 합의 내용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하에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협의체인 쿼드는 중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쿼드 플러스로 불립니다. 여기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은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쿼드는 안보 협의체로서 중국을 겨냥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위험, 교역타격 위험, 북한 핵문제를 풀 수 있는 중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쿼드 가입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를 동일시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분단국이고 통일을 위해서 중국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필요 없습니다.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미국에게 완전히 안보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관련하여 소위 '삼불(三不) 방침'이 있습니다. 첫째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 MD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셋째 한미일 지역동맹을 구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 표명한 입장으로 한국정부의 고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새 정부가 출범되면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문제

...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방위비를 9조 8천억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500% 인상을 요구했고 한미 실무협상을 통해 5년간 인상안에 합의했으나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다행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여전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게 작전 지휘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온전한 군사 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군사 작전권을 남의 나라에게 넘겨준 국가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격화되지 못했고 한미 양국이 계속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문제는 미국의 대외전략에 따라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현재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재편, 조정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남중국해 지역에 미군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관계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의 한 축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 중반기 때 이런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한일관계는 계속 갈등 상황에 놓여있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할 경우 중국을 견제하며 일본과의 화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격차가 줄어들어 따라 느끼는 불안 의식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의 영해와 영공을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해양 순시선

을 주변 해역에 보내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면 일본 민간 우익들이 독도를 무단으로 점거해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군사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두 동맹국 간의 전투이기 때문에 개입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잠재적 위협에 놓여 있는 회색지대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이 필요합니다.

평화체제의 방향은 연합론이다

...

중국의 입장은 '전랑 외교(Wolf Warrior Diplomacy)'입니다. 중국은 과거, 국제문제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은 인도와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을 위협하기 위해 메콩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대일로의 7번째 구상은 동북아 경제회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북아 경제권의 시범사업으로 북중 양강 경제지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대로 이루어지면 중국은 북한의 철도 부설에 개입하여 대한민국 철도와 연결하려 할 것입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북한은 중국의 경제권에 편입될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분단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며 회색지대 사태에 대한 자주국방의 대비가 필요하고, 남북 간 대립과 갈등보다는 평화 공존을 위한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평화체제의 목적은 평화통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공존론을 추구합니다. 평화공존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서독 사례와 같이 남북이 일단 두 개의 국가로 공존하자는 양국론이며, 다른 하나는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해 연합의 길로 가자는 연합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합론의 입장을 지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지향성

한반도 안보와 전략 환경

강연자 유호근 兪浩根

• 청주대학교 교수

한국의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통 충북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 비전통안보분과 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국가전략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보훈학회 회장, 충북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국제질서의 패러독스》,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국제관계》, 《지역통합의 국제정치경제》, 《국제관계학: 인간과 세계 그리고 정치》, 《현대 스포츠 외교사》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최근 한반도 지역의 안보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세대 전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형태로 개발전략을 추진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해온 사회주의 중국이 괄목상대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군사역량 강화와 첨단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원과 역량을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역내 주요 세력들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갈등과 대결 양상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역 내 주도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해양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또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지역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전환을 강화시켜 미국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제어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의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단기 목표는 급부상하는 중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 현상^{status-quo}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이 이 지역의 패권을 갖는 것을 막고,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 변환에 조응하여 미일동맹 강화에 집단자위권의 확장을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변화된 정책 투사는 지역 내 정치·안보 지형의 구조와 방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오랫동안 자국이 한반도 안보의 이해당사자임을 확인시키고자 노력해왔지만 사실상 개입의 범위와 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정책'으로 21세기 세계 정치·경제의 무게중심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러시아 또한 유라시아전략과 아태지역중시정책이라는 신동방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런 방향성은 2012년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시작된 현재 4기 푸틴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틴 버전의 한반도의 재균형 정책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역내에서 러시아가 주요 행위자로서 자리매김되지 않는다면, 향후 글로벌 리더로서 국가 위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

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개입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다자적 관여와 접근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면, 상대적으로 한반도 정책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강화되고,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 지역 안보 정세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접근은 비핵산 레짐 달성 차원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공동 접근의 필요성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구도 강화,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아세안 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반접근 전략'과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관여 정책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는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관리와 이행을 위한 한미 간 공조 등 다양한 쟁점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정치·경제의 패러독스

...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 및 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

은 이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세력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축에는 냉전 시기부터 줄곧 역내 정치·경제 및 군사·안보 분야에 깊숙이 관여해온 미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내 국가는 아니지만 역내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유지해온 아시아-태평양 세력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냉전 시기에 안보 차원에서 소련의 사회주의 이념 확산 저지를 대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기축으로 한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양자동맹 구도를 이용하여 강력한 대소 봉쇄망을 구축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선도자로서 동일한 체도를 채택한 국가들 간에 이익을 공유하고 증대하기 위해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해온 유럽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미국은 역내의 핵심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냉전 종식 이후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 간 갈등 구도가 사라지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미국은 아시아보다는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의 현안을 다루는 데 정치·군사·안보·외교적 관심과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9·11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동 지역의 이슬

람 근본주의 및 반미 세력 또는 정권들과의 싸움에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에 걸쳐 중국이 새로운 지역 세력으로 부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패권에 도전할 잠재 세력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중국은 2010년대에 진입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2위 자리를 수성해왔던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까지도 추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지난 수년간 이러한 경제적 성취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원을 군사적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폭 투사해왔습니다. 경제력 제고와 군사 역량 강화를 통해 갖게 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수년 전부터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자국과 이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분야에서 점차 공세를 적극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이해관계를 다투는 당사국들은 물론, 냉전 시기부터 이 지역의 안전보장 세력으로서 역할을 해온 미국의 입장에서도 관심과 우려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와 같은 안보 협력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안보적 압력 요인에 대하여 현재의 지정학적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정세는 역내 국가들 상호 간의 높은 경제적 상호 의존과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패러독스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 강국의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부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내의 경제적 통합이 전통적인 국가 간 주권 개념을 약화시키는 한편, 고질적 영토분쟁과 민족주의의 고조에 따른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비대칭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내 국가들 상호 간의 높은 경제적 상호 의존과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들 간 불신과 적대주의 또한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군사적 대결구도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라 지칭합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심화 현상은 역내 교역 패턴의 흐름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향후 역내 국가 간 상품 교역의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 현상을 놓고 볼 때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최근 한반도 지역에서는 아세안을 축으로 하는 한국, 일본,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유사한 형태의 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2020년 조인되었습니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미국, 일본-인도, 중국-태국, 일본-태국, 일본-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이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

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이곳에 가입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도 가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의존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호 의존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요 행위자 국가들이 물리적 힘의 행사와 전쟁에 의지하기보다는 평화적 협상과 거래를 통해 쟁점을 해소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행위자들은 물리력이나 전쟁을 선택하여 문제 해결 시 발생하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리적 행사를 피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결국은 안보 영역에서 평화와 상호 협력을 추구하는 행동 방식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럽 사례에서 보듯 경제적 상호 의존이 국가 간 정치적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확장된 국가 간 협력체로 발전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들 간의 높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대결 구도로 안보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며, 이로 인해 안보적 불확실성 또한 높은 비정상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자안보 제도의 취약성



한반도 지역의 안보 정세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

은 이 지역 안보문제를 협력안보, 집단안보 등 다자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자안보의 틀은 전통적인 세력균형인 군사균형과는 달리 강대국들을 제도 내에 편입시킴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제도적 균형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냉전 시기 양 진영 간의 긴장완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É}가 회기를 거듭하면서 참여국 간에 신뢰형성의 기제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이후 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미국이 지역 균형자 역할을 하는 가운데 양자동맹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안보 구조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경험을 준거로 몇몇 국가에서 정부 간 다자 안보대화 출범을 모색하거나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한 구상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역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순수 정부 간 공식 다자안보대화 채널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점진적 접근법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안보대화로서 구상되었습니다. 즉, ARF는 지역 안보 이슈를 다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역내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조치를 개발할 수 있는 장으로 기대되었던 것입니다. 아세안은 역내 지역 질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 사이에서 ARF를 통해 자신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길 원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역내 안정적인 힘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구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은 ARF에 주요국들을 참여시키면서 아세안

이 표방하고 있는 의사결정방식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ARF는 국내문제 불간섭주의, 비구속성, 비공식성, 컨센서스라는 독특한 규범에 의해 지배되어 왔습니다. 즉 ARF는 아세안을 축으로 소위 ‘아세안 방식’에 입각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 촉진을 위한 안보협력체를 의미합니다. ARF는 안보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역내 국가들 사이에 신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일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들 간 결정사항을 강제하는 결정을 도출할 수 없으며, 참여국들이 종종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쟁점을 국내문제로 주장하며 논의를 회피하기 때문에 현안의 실질적 이행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ARF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국을 보면 ARF는 역내 국가들 외에 유럽연합^{EU}, 파키스탄과 같이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거나 정치적 배경을 달리하는 역외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당사자들 간에 안정적인 균형을 창출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안보 제도나 기구는 국제관계에서 세력을 투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에 의해 제안되고 나머지 국가들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작동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에서 그러한 제도를 발의하고 주도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의 열위^{劣位}에 있는 아세안입니다. 그 이유는 역내에 위치한 주요 세력인 중국과 일본이 지역 주도권 경쟁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세안이 그러한 역할을 자임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역내에는 직접적인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ARF 외에도 정치·안보,



제25회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경제·무역·금융, 사회·문화, 환경, 개발협력, 에너지, 과학·기술, 재난 등 다수 이슈에 관해 협력을 추구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중심에 있는 것 또한 아세안입니다. 예를 들어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성된 아세안+3, 아세안 10개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가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 지역에서 안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자제도가 보다 원만하게 작동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역내 주도권 경쟁 속에서 다자적 제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나 대화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안보 현안 해결을 위한 협상이나 합의 도출 채널이 아니며, 논의된 내용이 실질 정책으로 투영

되기보다는 서로 간에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국가들은 이와 같은 다자제도의 취약성으로 인해 잠재되어 있는 냉전적 대립의 양상이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습니다. 각국은 군사비 지출 확대를 통한 내적 균형화 노력과 동맹 강화를 통한 외적 균형화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 자국의 안보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태의 안보 접근은 상호 신뢰를 약화시키고,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력에 기초한 안보 역량 구축은 국가 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소위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및 전략 환경은 안보 딜레마 상황이 계속되면서 유동성이 높은 가운데 복잡하고 불안정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와 상호작용

미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외정책 초점을 아시아로 전환하는 소위 재균형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부상에 직면하여, 한편으로는 자국의 역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접근은 크게 역내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와 중국에 대한 관여와 봉쇄라는 양면에 걸친 전략 추진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중국의 군사전략 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보다 공세적 행동을 취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

에 이를 저지할 확실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한반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나 관여는 피하면서 동맹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접근하려는 소위 '외적 균형화^{external balancing}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습니다. 즉, 일본, 한국, 호주 등과 같은 역내 동맹들에 대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역내에서 지속적인 관여를 유지하는 한편,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자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떠받치는 핵심 기제로 일본을 활용해왔습니다. 동맹 내에서 일본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군사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지원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동맹 역할을 확약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 정책 결정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현대화,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역내 불안정 요인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과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보다 일반적으로 동북아시아 안보질서 안정화를 위한 한 축으로서 동맹 강화를 추구해왔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한반도 안보 전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역내 최대 동맹인 한미일 3국 간 공조체제 강화가 우선 과제라고 판단해왔습니다. 이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자관계 개선을 독려해왔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가 단순한 양국관계 관리 차원을 뛰어넘어 한일관계 복원을 통해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집중하는 중국의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왔

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전략은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미국 제일주의'보다는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표방하면서 국제 협력, 다자주의 그리고 동맹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견제와 중국 때리기는 체제와 인권, 대만, 기술 경쟁 문제 등으로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맹과의 협력 강화 맥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연결망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전략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존의 안정 질서를 재고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호주,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을 포함하여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함과 동시에 중국을 역내 질서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적 행위자로 유도하겠다는 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공세적 행동은 미국 대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기존 대외정책은 유럽과 중동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패권이 점차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의 대외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차순위 5개국을 합한 것보다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력 자원 배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세 구축을 위해 동맹국에 보다 적극적인 안보 역할을 떠맡아줄 것을 희망해왔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2021년 4월 16일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몇 가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 둘째, 이를 통한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 셋째, 홍콩과 위구르의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대만문제는 미국이 지금까지 인정하던 '하나의 중국' 정책의 기본 원칙이 변화된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압박 등 국제규범 질서에 어긋난 우려를 표명하였고,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인 요구와 행동에 반대한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본과 호주,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 또한 아시아 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2년 1월 미 국방부 방위전략 지침은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이 서태평양과 한반도로부터 인도양과 남아시아에 이르는 넓은 호^{arc}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기존 동맹국들은 물론, 인도와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를 중시하게 된 이유는 인도가 지정학적·전략적으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미국은 싱가포르에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높은 연안전투함을 배치하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호주, 일본 등과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베트남에 대해 베트남전쟁 이후 실시해왔던 군사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철회하기로 하는 등 군사협력 관계를 확대해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을 봉쇄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게 하고, 그러한 포위 전략에 대처해야 된다는 전략적 사고를 강화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은 외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 목표를 실현하고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관철하기 위하여 군사전략을 혁신하고 군대의 사명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을 통해 유리한 전략 태세를 조성하고 국가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해 견고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관과 그에 입각한 안보 임무 및 전략은 시진핑 체제 출범을 전후로 보다 뚜렷하게 표출되어 왔습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 또한 이전과 비교할 때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후진타오 집권 시 중국 대외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후진타오 체제는 기존의 장쩌민 체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국가정책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외관계 또한 이를 위해 유리한 환경 조성과 유지에 방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후진타오 체제의 대외정책은 중국이 타국에게 위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후진타오 체제 출범 초기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미래 상에 대한 포부로서 ‘화평굴기(和平崛起)’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9세기 중국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떨치고 국제무대에서 대국으로 일어난다는 의미로서 그러한 과정이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뚝 솟는다는 의미의 ‘굴기’가 국제적인 세력관계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저의를 의심하거나 경계할 것을 우려하여 곧바로 이를 ‘발전’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진타오 체제 이후 중국 대외정책 기본 강령으로 ‘화평발전(和平發展)’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평화추구 국가로 인식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평화 또는 조화와 같은 온건적 표현 보다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시진핑 체제는 새로운 선전 구호인 소위 ‘중국의 꿈中國夢’을 통해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중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과거 굴욕의 역사를 되새기며, 자국의 상처와 충격을 상기시켜 왔습니다. 이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집단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심리적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는 굴욕적 경험을 상기시켜 국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결의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정치적 선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꿈은 원칙적으로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선언된 수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제 정치적 의도와 관련하여 보다 공세적인 태도로의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담론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의미의 중국식 표현 ‘부흥’은 국제관계의 향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더 부유하고 강력해진 중국이 기존 질서에 도전하여 새로운 중국 중심의 질서로 재편하려는 현상타파 세력이 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비록 중국이 국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다른 국가와의 불편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내용만을 언급하고 행동하는 것은 향후 역내 질서의 향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대미관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의 역할론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국제체제의 구조적 흐름이 중국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변화 시기에 새로운 글로벌 세력으로서 자국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점점 더 분명하게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요구는 그러한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021년 3월 중순 알래스카에서 개최된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두 나라는 합의문도 없이 세 차례의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시종일관 자국의 입장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질서를 위협함으로써 양육강식의 세계를 만들려 한다”라고 비판했고, 중국은 “세계가 미국의 가치를 불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중 상호 간 기본 입장에 따른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은 회담을 마치면서 “미국과의 회담은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유익했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 측과 광범위한 의제로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란과 북한, 아프가니스탄, 기후 분야에서 우리의 관심사를 공유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도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와 같은 구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중 AIB 구상은 2013년 10월 중국, 인도, 파키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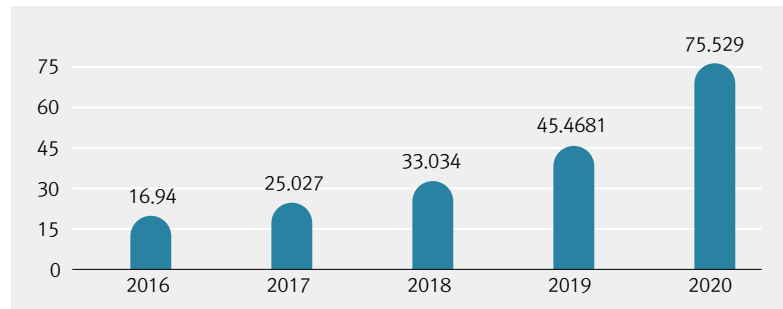
싱가포르, 베트남 등 21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년 후인 2014년 11월 설립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격화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투자은행에 초기 출자금의 50%인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는 등 계획을 주도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를 중국판 세계은행으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관리구조의 투명성 결여와 대출기관들이 조건으로 제시해 온 환경, 노동, 조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기구 설립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동 기구를 중국이 주도할 경우 이것이 중국의 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역내의 기존 세력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물질적 역량이 제고되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이 기존 질서에 순응하고 책임 있는 지역 및 글로벌 행위자로서 더 큰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축적된 힘을 통해 팽창주

AIIB의 투자액 증가액

(단위: 억 달러)



(출처: AIIB 홈페이지)

의 혹은 패권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이를 견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안보 딜레마 현상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하여 중국은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패권이 나 강권정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적 발전과 평화적 외교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평화적 부상과 협력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역내에서는 해양영토를 둘러싼 영유권 주장과 공세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해양 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안보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안보 및 발전전략의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중국 국방백서는 해양이 중국의 장기적인 지속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 해군은 향후 기존의 연근해 방어에서 원양 방어로 작전 범위를 넓혀 해양주권과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육군을 중시하고 해군을 경시했던 기존의 전통적 군사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백서에서 중국의 꿈은 강국의 꿈이며,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강군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기술함으로써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은 최근 해군의 남해함대 전력을 대폭 증강했습니다. 현재 중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 등 3개 함대 중 남해함대는 다른 함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중국은 동 함대에 공격용 핵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및 여러 기의 신형 유

도 미사일 장착 구축함, 상륙용 전투함 등을 남해함대에 배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작전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동 수역 분쟁에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전략적 지향성과 남북관계의 경로

전략적 지향성

중국의 급속한 세력 확장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한 견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미중 갈등의 격화 혹은 안정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변 정세의 동태성은 한반도 안보질서의 현상유지 또는 현상타파와 관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자국의 군사력을 포함한 하드 파워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헌법을 재해석하여 집단자위권을 발휘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의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미중의 정책 변환에 따른 세력관계의 변화, 중일 간의 점증하는

갈등관계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등과 연관된 주요 쟁점은 직접적인 안보정세의 현안으로 표출될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하는 한반도 역내국가들 간의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투사될 것입니다.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협력의 틀을 활용하여 보다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었으나 지난 수년에 걸쳐 오히려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의 구조 내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안보 분야는 여전히 국가 간 경쟁과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현실의 국제정세에 투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위계적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세력구조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세력 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power politics}’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지 모른다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반도 지역 정세를 보다 안정적인 구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제도화를 강화하는 방향의 대안적 접근법이 요구됩니다. 즉, 세력 정치와 안보 경쟁은 불가피하게 지역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국가들은 전통적인 내적 균형화^{internal balancing}에 몰입하는 경성 전략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 기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한반도 지역에 만연한 불확실성 요소들을 해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규칙과 규범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유럽에서 과거 동서 간 대화와 협상 포럼으로 출범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1975년 정치, 군사, 경제, 환경, 인권 및 사상, 양심, 종교, 신념 등 기본적 자유 존중의 내용을 담은 ‘헬싱키 최종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련의 회의를 통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은 정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사회주의권의 인권 관행 문제와 미흡한 자유 존중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고, 이는 마침내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례와 경험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제도적 접근이 핵심 안보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레짐 창출은 한국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제관계 질서는 대부분 힘이 있는 주요 세력들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노력은 미국, 중국 등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과거 제안되거나 존재하고 있는 다자안보대화들이 실천적 이행을 연결되지 못했던 이유는 강대국들의 동의와 이행을 유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적 안보전략의 효율성 제고도 중요합니다. 우선 미국은 냉전 시기 이후 줄곧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한 안보 제공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에 대한 완전 봉쇄나 고립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립과 협력의 전략적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

다. 중국 또한 대외적 위상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물질적 편익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한국은 안보와 경제 중 어느 한 쪽에 편향되는 경직된 전략보다는 양자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이중전략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주도의 안보체제에 동참하되, 그러한 행동이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에 대한 포위 전략으로 여기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 논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안보 기제입니다. 중국의 부상 이전에 이미 존재하여 가동되고 있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을 봉쇄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노선은 소위 전략적 경쟁관계로서 대립·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부문에는 적극 동참하고, 경쟁부문에는 자율적으로 민간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부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립이 예측되는 부분의 참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의 분명한 지향점은 자국의 안전 보장과 더불어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것이고, 중국에는 최소한 아시아 지역에서 그들의 패권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돌파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의 전략은 모두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방향성을 인지하면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주변국에 대해 정치적 주종 관계를 요구해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위계적 질서에 따른 관계 설정에 동의하면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물리력을 통한 강제력의 행사라는 역사적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19세기 서세동점(西勢東漸: 서양이 동양을 지배한다)의 시기에서부터 지난 100여 년 동안 중국은 그러한 힘의 확충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면

...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2019년 말 조 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대북제재 정면 돌파를 선언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경제강 국 건설이나 주민생활 향상을 이뤄나가기 어려운 것이 북한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북한은 최근의 코로나19 방역문제 등이 겹치면서 다중 적 딜레마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력 보유 노력

은 오히려 주변국의 군사력 확충,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 등으로 안보 딜레마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북한은 외교 안보 딜레마 상황을 타개할 묘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담보를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 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하드 파워 차원의 세력균형이 필요합니다.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핵우산이라는 안정적 가동 장치를 확실하게 유지하고,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전쟁 억지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남북 간 '경제 상호 의존성'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상호 간 경제 의존성이 높으면 대립과 갈등에 수반되는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는 일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도 결국 석유·식량 등 경제적 의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사례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경색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능적 협력의 방안 계획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설치 합의 등에 바탕을 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남북 통합 경제권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셋째, 남북한 사이의 인도적 지원 또는 경제협력 과정에서 대북협

력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대북협력의 지속성과 연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남남갈등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향후 남북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 대북정책은 국민적 공감대 구축과 지지 형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예고 없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 완료 후 더 이상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등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주로 남북한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했지만 불안정한 재원 조달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북핵문제를 평화적 해결 프로세스로 다시 진입시키려면 한미 간의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추진하는 실용적 접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 일본, 여타 동맹·파트너들과 계속 협의'할 것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단계적 대화와 제재,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간에 균형적·동시적으로 이행하면서 이후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단계적·점진적 조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바이든 행정부를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고 설득함으로써

써, 북한이 받을 만한 제안을 제시하며 북한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어야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 안보 정세는 주변 대국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거나 상존하고 있는 긴장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한반도 전략을 고려하여 한국 또한 보다 실효적인 방식으로 도전 요인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의 과제

대북정책의 흐름과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강연자 **천해성** 千海成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 통일부 차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통일부에 입부(행정고시 30회)했다.
인도협력국장, 대변인,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남북회담본부장,
통일정책실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초대 소장,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대북특사단 대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남북관계발전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오늘 강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한국 정부가 추
진해온 통일, 대북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져 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난 3~4년간 한반도 상황, 남북관계에 어떻게 적
용되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통일정책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돌아켜보려면 제1공화국 이
승만 정부부터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
전과 함께 민족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패전은 우리

민족의 해방이었지만 사실 분단으로 이어지는 미완의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 패망 이후 북위 38도선을 기점으로 이북지역은 소련군이, 이남지역은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미군정을 거쳐 정부 수립과 민족분단으로 이어지는 혼돈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좌우의 대립, 국제적으로는 UN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1947년 11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자유총선거에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결의의 주 내용은 유엔 감시하에 남북이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에 따라 38도선 이남지역에서 자유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1948년 5월 제헌의회가 구성되어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고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반면 38도선 이북지역은 유엔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소련군과 김일성은 북한에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였고, 결과적으로 민족이 분단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북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지역은 불법으로 정부를 참칭한 상태로 규정했고, 우리는 유엔총회 결의를 받아들여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당시 한국 정부는 북진통일론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의 총선거를 통해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비슷한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다. 1960년대 4·19혁명 이후, 제2공화국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 또한 제1공화국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통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제2공화국은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을 계승했지만, 통일보다 경제 건설을 우선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은 기본적으로 실지 회복을 위한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통일, 선 경제 건설 후 통일과 비슷하게 우리 내부의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는 등 통일과 관련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전의 정부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1960년대 후반부터 국제정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소 간 데탕트 움직임이 있었고 1970년대에는 미중 간 수교협상이 이루어졌고 일중 간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1969년 3월 1일 처음으로 통일부가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내부적인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결과입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통일정책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는 북한이라고 하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때부터 현실적인 존재로 실체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1971년 처음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1972년에는 7·4남북공동성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당국 간 합의 과정에서 비밀 접촉이 있었으며, 공동성명의 핵심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 당국 간 회담이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1970년대에 접어들어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에 따라 평화정착과 대화교류, 신뢰조성과 동질화 촉진 등 좀 더 구체적인 남북관계가 시작된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 후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열린 제21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광경(1972. 7. 10.) (사진 출처: 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

제5공화국은 이전 정부와 달리 남북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 정상회담에 준하는 최고 당국자 간 회담개최를 제안했고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마련했으며, 구체적으로 20개 실천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남북 간에 구체적 진전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헐적으로 남북 간 경제회담, 적십자 회담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87년에 6·10 민주항쟁과 더불어 헌법이 한 번 더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의 헌정 체제인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시작되었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은 국내외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1988년 공식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 시대의 남북관계는 이전 정부와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와 더불어 소련 연방 해체 등의 일련의 사건은 국제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르바초프 시절부터 소련 내에서 이루어진 개혁·개방의 흐름은 결국 동유럽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집권한 노태우 정부도 7·7선언(1988년, 북한을 대화와 교류의 상대, 통일의 동반자로 성격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수교를 하지 않았던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하는 북방정책을 외교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북방정책을 채택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교류와 접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는 민족 내부 거래라는 입장에서 관세 등이 없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로 설정했습니다. 통일정책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회의 통일 특위 설치라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가까운 공청회, 청문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여야가 합의한 통일정책을 1989년 9월 노태우 대통령 국회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입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통일정책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야가 합의했고, 사회적 협의와 공론화과정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7·7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고위급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현재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계기는 1991년 9월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이었습니다. 중국의 권고와 북한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노태우 정부 때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인해 한반도에서 북한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고, 이런 환경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계속해서 제약하였습니다.

이후 진보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이른바 ‘햇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남북이 공존하며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 단계적 통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서명에 앞서 손을 맞잡은 남북 정상 (사진 출처: 연합뉴스)



1998년 11월 해로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는 등 당시 남북 당국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도 있었습니다. 2000년 6월 15일에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 장관급 회담, 분야별 남북회담이 추진되었으며 금강산 육로 관광,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의 공동 번영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취지의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07년 10월 4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10·4 선언'이 채택되는 한편, 여러 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전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북한이 합의를 깨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고 이는 남북관계에도 지속적인 장애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남북관계는 상

대적으로 경색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구상하긴 했지만, 북한 핵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려 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에 따라 경색국면이 지속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했으나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한반도 상황은 계속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갑작스럽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기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이었습니다. 모든 회담 채널이 다 사라졌고 개성공단도 중단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서 전쟁의 위협마저 느껴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라는 두 가지 정책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궁극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평화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했는데,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남북 협력 상황 진단

북핵문제 해결과 신경제공동체 구상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목표로 내세운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은 사실 1993년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후 역대 정부가 중시해온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정착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이를 통합된 하나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즉, 북핵문제와 평화정착문제를 하나의 과제로 인식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때로는 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즉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안정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하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포괄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냉전구조를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를 수립하는 길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농축, 재처리를 통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합의해 나가자는 전략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되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동반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단계적이며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병행해서 진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핵문제와 별개로 남북관계부터 진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인 접근법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문제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병행, 선순환해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입니다. 역대 정부별 대북정책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보수·진보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있었고 또 정부에 따라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든지 안보를 좀 더 강조하

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전진과 후퇴가 되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이런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시해야 하는 남북 간 합의들이 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4·27 판문점선언 등입니다. 정부 교체에 따라 정책이 변화해도 정상들끼리 합의한 것은 그 정신을 계승하고 변함없이 이행한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남북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합의도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국회비준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가 동의하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기에 법적인 책임으로 귀속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입니다. 이것은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남북관계 지속·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 내부에서의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국민적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가능하다면 국내적으로는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바뀌어도 큰 틀의 변화 없이 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북한과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수정부와 진보정부를 거치면서 당시 서독의 대 동독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말 사



한반도 신경제 구상 (출처: 통일부)

민당 정부는 대 동독정책으로 동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서독에서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보수성향의 기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변화추구, 동서독 간의 기본협정, 정상회담, 경제협력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통일로 이어지는 든든한 토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목표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입니다. 이는 황동해 벨트, 환서해 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를 포함하는 신경제지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신북방정책을 통해 중국, 러시아의 발전전략과도 연계시키

고 신남방정책을 통해 미국, 일본, 인도-태평양을 연계한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를 넘어 다자 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에 우리의 경제공동체 구상이 맞물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2018년에는 북한이 우리 손을 잡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30여 차례의 남북회담 등 남북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북미관계도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선언 재확인, 완전한 비핵화 추진,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유해 송환 등에 합의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관계 진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여러 진전들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병행·진전되어야 하고, 북핵문제와 평화체제 문제가 포괄적·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2018년은 이를 적용하고 실현한 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의 대화가 2018년 하반기부터는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은 특별한 성과 없이 결렬되었고 오히려 북미관계가 악

화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미 간 북핵문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용조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남북관계도 경색과 교착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미회담을 진행하고 남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회담을 개최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면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모두 교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0년 1월부터 국제사회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보편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다루어온 안보는 무기, 병력 등 군사력 중심의 전통 안보입니다. 주로 국가의 영토나 주권을 보호하고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는 제로섬 게임의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장 이후 국민의 건강, 미세먼지, 기후변화, 환경문제, 경제문제 등 삶의 질에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들도 안보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은 군사적인 위협보다도 훨씬 크고 빠르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런 위협 상황을 지역과 영토를 초월한 초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코로나19는 해결되겠지만,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 간에도 대결이 아닌 협력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북한이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노력에 호응하고 있지 않지만 남북 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북한도 필요성을 인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접경지역의 산불, 홍수 등과 같은 재난 및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남과 북의 협력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는 역설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단절된 관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남북관계의 어려움

...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폐쇄 수준의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한의 보건 의료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해에 북중 간 교역, 북러 간 교역이 90% 이상 줄어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19 그리고 지난해의 홍수와 태풍 피해로 인한 식량 부족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전통 안보분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가시적인,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태도만을 보여 왔습니다. 동시에 북한 내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내부 체제를 단속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1년 1월 달에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했습니다. 당 대회에서 북한은 김정은 중심의 내부체제 정비, 노동당 중심의 내부체제를 정립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새롭게 계획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해 전적으로 남한 당국 태도에 달려 있다고 책임을 우리 쪽에 넘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와 같은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남북관계는 군사적인 적대행위 등과 같은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바뀌더라도 미국의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불변하며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대강, 선대선' 입장을 표방했습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입장을 보면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해 관망하면서 우리와 미국의 정책전환, 태도변화를 강하게 압박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의 남북 평화 로드맵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맥락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이는 미국 내 언론보도, 인터뷰, 고위당국자의 입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연설을 통해 “북한, 이란 등의 핵문제가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위협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라고 하는 방법과 함께 엄정한 억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은 동맹들과 협력, 조율하며 국제사회와도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 결과 확정된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외교와 엄정한 억제를 원칙으로 하여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트럼프 정부 시절 있었던 일괄타결, 톱다운 접근을 버리는 한편 이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하지 않겠다는 것, 즉 두 접근법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부분을 뜻합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인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장에는 우리 정부의 인식이나 판단도 상당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대북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실천되느냐, 그리고 미국 대북정책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실천 조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는,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외교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한미 간 어떻게 협의되는지 특히 미일 동맹 관계에서 미일 간의 협력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을 여러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전략적 관계가 때로는 갈등, 때로는 협력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전략적 관계가 긍정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한편, 이런 변화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대응과 우리의 입장

...

아울러 북한 입장을 보면 제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처해 있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자급자족, 자력갱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대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당이라든지, 김정은 총비서 중심으로 내부체제를 정비하는 모습이 연이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 대회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각종 회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내부체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질서 안정을 위해 사회주의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강대강 선 대선' 입장하에 공을 우리나라 미국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또는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비난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관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의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분담금 요구 때문에 힘들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5월 21일 미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진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5월 20일 미국을 방문해서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회담도 이런 방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북한이 이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할까요? 우선 튼튼한 안보와 억제력은 기본입니다. 그러려면 자주국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협력으로 메꿔나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안보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안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의 첫 번째 과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제기된 1990년대부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등을 막는 동결부터 시작해서 시설들을 해체, 폐기하는 과정들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적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조치들이 동시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 또한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북한은 자신의 입장에서 미국과 우리에게 대해 불신이 고조된 상태이며,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비핵화와 상응하는 조치들이 동시에 이어지고 나아가 이런 것들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문제, 대량살상무기들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정전협정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임시적으로 만들었던 체제였습니다. 군사정전위 등은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정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 방안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로 진입하는, 즉 실질적으로 평화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정착은 단순히 평화협정 체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조약만으로 안정적인 평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입니다. 남북 간 수많은 논의를 통해 공동의 인식이 있었고,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9·19 군사합의도 발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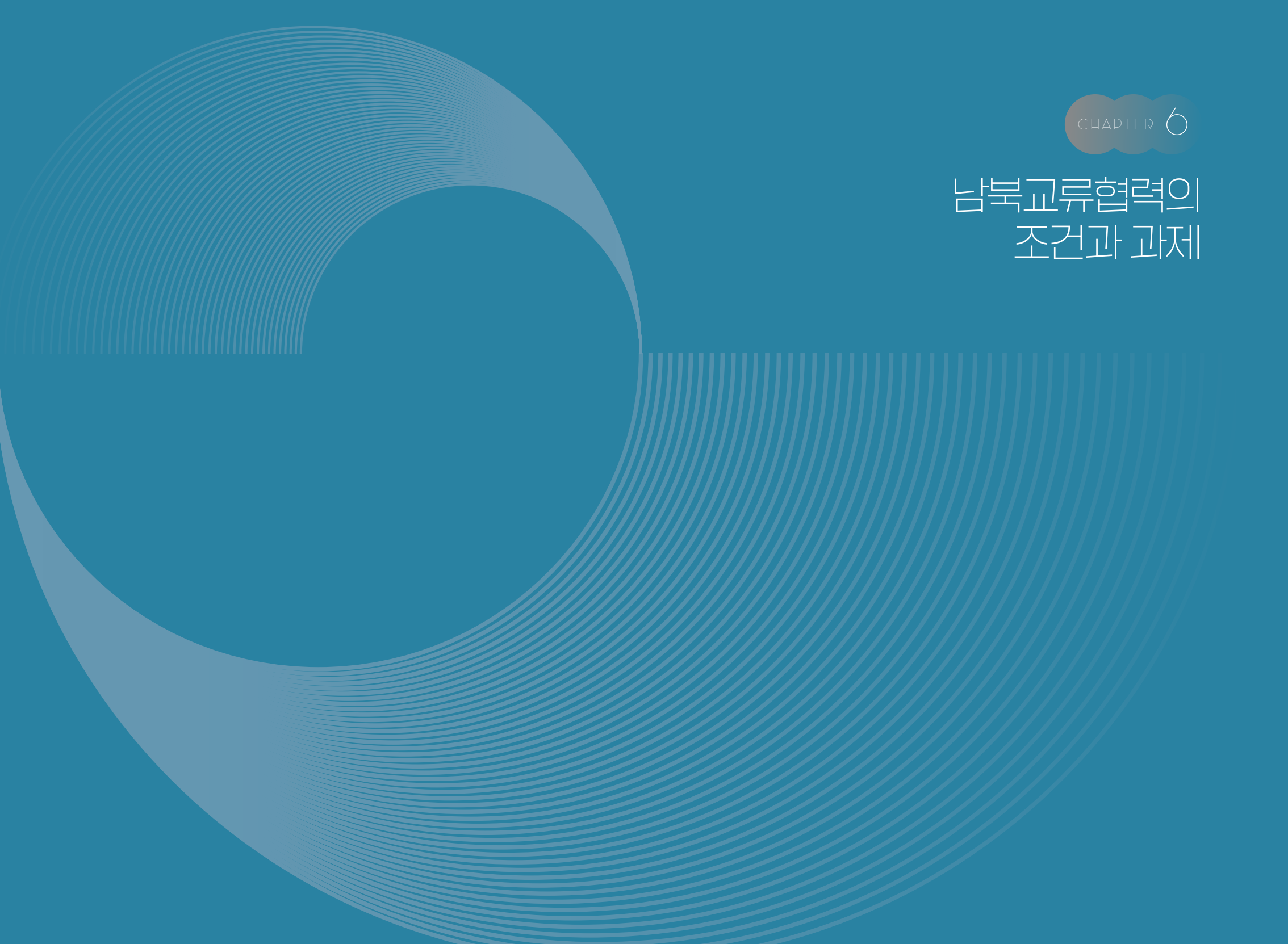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놓여 있지만 9·19 군사합의는 북한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노력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초보적인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은 전방과 비무장지대에서 중무장 상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긴장을 막기 위해 GP를 철수하고 그 공간을 평화적인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9·19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신뢰구축이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운용적 군비통제까지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초보적인 조치이지만 나아가 군사력의 구조까지도 바뀔 수 있는, 구조적 군비통제까지 이어진다면 남북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평화공동체는 보건의료 공동체, 경제공동체 등을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일, 북미 정상화를 통해 이런 분야의 공동체가 남북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 전체 평화 안보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비핵화, 평화체제, 군비통제, 전반적 남북관계 발전,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등 포괄적이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이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이 구축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남북한 간 노력뿐 아니라 남남갈등 해소, 국내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조건과 과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강연자 **이기완** 李起完

•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통일부 경남지역 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사)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미국 워싱턴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경남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조건

...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원시협의회 교육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습니까?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간의 비핵화 합의가 결정되면서 북미관계뿐 아니라 남북관계도 담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열기도 서서히 식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화

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은 한반도의 정치상황과 남북한의 정치상황에 따라 커다란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시기에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활기를 띠었던 반면, 그 반대의 정치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침체국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 요인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북미관계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남북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북미관계, 남북관계, 중앙-지방 간 관계가 상호 어떻게 연계되어 나타나는지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대비하여 어떠한 단계별 추진 전략과 원칙들을 설정하면 좋을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제약 요인

...

앞에서 설명했듯이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우리 사

회의 관심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업의 제약요인을 분석하기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조정, 관련 법규의 정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업 발굴 등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척 여부입니다. 그 이면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이후에도 계속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를 열어 대북제재조치를 채택하고, 북한의 도발에 비례하여 그 강도와 범위를 확대해 나갔던 것입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면, 미국과의 갈등은 물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쪽 기업들도 제재대상이 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큰 틀에서 북미 비핵화 교섭이 진전되어야만, 그에 비례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10월 14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에 찬성하면서도 군사제재를 배제한 경제제재로 국한했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도 각국의 자율적 판단에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2월 7일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4호’를 발사했을 때, 유엔안보리는 3월 2일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대북제재의 범위와 강도가 훨씬 강화된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2270호가 채택되기 앞서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했고, 여기에 맞서 북한은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바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광명성 4호의 시험 발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2270호의 중심 내용은 석탄·희토류 등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생 목적의 수출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석탄을 수출하는데 군사용과 민생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상당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

제입니다. 북한을 고려한 중국의 반대로 단서조항이 생겨난 것이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전후하여 중국이 북한의 대중 수출의 최대 품목인 석탄을 전년 동기 대비 10.6% 더 수입했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에도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 되풀이하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6월 2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56호, 8월 5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채택된 것입니다. 2371호는 북한 기업 및 개인과의 신규 합작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국제사회는 고강도 대북제재 조치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375호에는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유엔은 11월 29일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유류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대외적 조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북미관계의 진전이 남북교류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유입니다. 북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협상입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게 되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동시에 북미 수교도 이뤄질 것입니다. 북미 수교가 이뤄진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의 지위를 획득할 것이고, 서구 선진국가와의 수교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북미관계의 변화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며,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핵개발의 토대를 제공해주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북한은 판문점선언을 준수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확대 재생산과 맞물려 그 동력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최우선 조건

비핵화 협상이 남북관계의 핵심이다

북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자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하위체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행정부에 따라 한반도 정책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경우에 따라서 때로는 강경정책으로, 때로는 유화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강온양면정책의 변화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선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지요. 즉, 대북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대북정책이 강경하게 나타나거나 유화적으로 나타난 것

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소위 '미국식 벼랑끝 전술'을 표방하면서 대북 강경정책을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도 있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그 귀결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입니다. 즉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대북정책의 방향을 짚으면서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전에는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도 없으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할 의사도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 현 단계에서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좀 더 강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의 대미정책도 이에 비례해서 그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4월 20일 북한은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대한 시험 발사 중단과 함께 북부 핵 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불량국가의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24일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 조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그해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즉 큰 틀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실무회담에서 북미 협상은 미국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완전한 비핵화 문제로 교착국면에 빠졌습니다. 2018년 7월 6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측 대표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핵 프로그램 리스트와 시간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체제 보장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미국 측의 체제 보장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이러한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7월 24일에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ICBM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7일 미군 유해 55구의 송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북한 측의 동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 우선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선 체제보장 후 비핵화를,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등을 주장하여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비핵화 문제를 구실 삼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측이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비핵화 협상이 중대한 난관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을 압박했죠. 그러나 미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기 전까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북미 양국의 대립으로 11월 8일 예정되어 있던 고위급회담이 연기되었고, 이에 따라 연내 개최 예정이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에 걸쳐 어렵게 성사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양국은 어떤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북미 양국이 비핵화-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이 자국의 입장만을 고수했기 때문이죠. 즉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북미관계의 교착이 남북교류협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도 해제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엔안

보리 대북제재가 일부라도 해제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5호 제18조는 남북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척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이고, 북한도 그에 비례하여 도발의 수위를 높여 북미 간 대결적인 자세가 한층 고조될 것입니다. 이러한 북미관계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남북대화 채널을 유지해 북의 군사도발을 막아야

...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대외 요소이며, 핵심 변수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두 번째 변수인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북미관계가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도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북미 양국이 협상 테이블을 완전히 박차고 나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양국이 협상 테이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북미 양국과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이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교착상태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12회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큰 호응을 보내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태도에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더라도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자제해야 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결국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즉 북한의 도발은 남북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남갈등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무조건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진행

되지 않는다고 하여 군사적 도발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 중단은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외적 요인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를 들 수 있으며, 내적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애매한 위상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주도권이 보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향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은 다소간의 조정이 요구됩니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교류협력이 종속될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다시 말하자면 컨트롤 타워로서의 중앙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은 기존보다 확

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역 당사자의 일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월 30일 일부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모호하게 되었어요.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의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승인받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민간단체를 후원하는 정도로 그 역할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2020년 12월 8일 일부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2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기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부여받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2003년 전라남도 영광군의 ‘영광군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시작으로 2021년 1월 기준 광역단체 17개, 기초단체 135개, 총 15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습니

다.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출연연구원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순환보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을 담당할 전문 부서를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체계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북관계의 열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담당 공무원의 수가 변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인구가 천만 명임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협력 담당 공무원을 현재 인원인 32명에서 더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된다고 해서 이런 부서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단계별 전략

...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은 비핵화의 진전 여부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욕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라는 현실적 장벽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북미 간 비핵화 논의는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전략과 중기 전략, 그리고 장기 전략을 세분화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사업이 대북제재 해제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정치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다소간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대북제재 수준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중점추진 분야, 그리고 목표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추진전략 3단계란 대북제재의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북제재가 일부 완화될 경우,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될 경우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 단계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사업을 발굴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발굴한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감하지 않은 분야들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북한의 특정 지역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업들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7가지 구체적인 전략

현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win-win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협력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중심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남북교류협력 대상을 사회문화교류 분야로 제한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북미 간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 상호 신뢰관계가 안정화되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의 대

상을 정치적 분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비정치적 분야로 국한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 갈등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점진적·단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의 진척 여부와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 등을 고려하면서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지나친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은 경우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 사업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중복사업을 방지해야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내용은 북한의 27개 특구·개발구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사업 편중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 사업을 상호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우리 측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비교하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주민 의사에 기초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

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화통일 관련 단체 및 사회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사업 방향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역민의 평화통일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통일정책 및 관련 후속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 강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지역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시 민간통일운동 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433개의 민간통일운동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이 너무 취약합니다.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통일운동 단체가 많아져야 통일 공감대 형성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통일운동 단체의 재정적 자립도와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 상황에 따라 민간통일운동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이 빈번히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민간통일운동 단체가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제도적으로 뿌리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인적·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남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라

...

지방자치단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척 정도에 비례하여 대북제재가 일부 해제 내지 완전 해제될 경우를 대비한 지속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 분야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남북한 간에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국민 및 주민의 경제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론의 장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에 의한 예산 낭비와 중복사업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남 통합입니다. 남남 통합은 중앙정치 수준에서의 갈등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지역 간 갈등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남남갈등 해소와 남남 통합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성공의 지름길이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강연자 전영선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북한 사회문화 연구와 남북 문화의 소통을 주제로 학술 연구와 대중과의 소통을 고민하는 통일디자이너이자 통일문화번역가다.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김정은 시대의 문화-전환기 북한의 문화현실과 문화기획》, 《어서와 북한 영화는 처음이지》, 《북한의 언어: 소통과 불통 사이의 남북언어》, 《북한의 정치와 문학: 통제와 자율사이의 줄타기》 외 다수의 저서와 「북한의 아동영화 창작 지침과 교양 양상」, 「남북생활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외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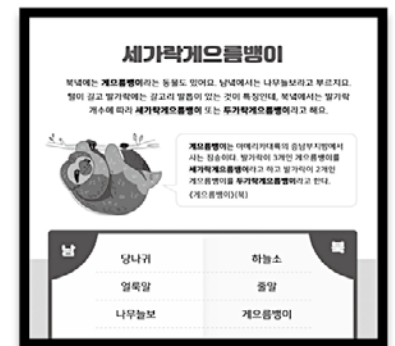


언어와 해석 공동체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는 언어문화의 차이

분단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세가락게으름뱅이를 아십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세가락게으름뱅이는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나무늘보를 가리키는 북한말입니다. 정확하게는 북한의 표준어인 평양문화어입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나무늘보를 세가락게으름뱅이라 말하고, 우리가 쓰는 당나귀라든가 얼룩말 같은 단어를 하늘소, 줄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와 언어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는 무엇이고 언어문화는 또 무엇일까요? 언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남북은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그 말에 담겨진 문화에서 이미 차이가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를 할 때 쓰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사과 표현도 의미 변수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는 결국 언어문화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요 내용은 언어와 해석 공동체 그리고 북한의 언어정책,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 말다듬기 사업과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의 언어문화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언어 문제, 언어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언어와 해석 공동체인데, 이 두 가지 용어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해석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사회 통념적으로 해석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그 말이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사용할 때 특정한 단어가 사회에서 사용되는 맥락을 모르면 인종 차별적인 표현을 쓴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찬밥’이라는 표현을 쓰면 단순히 ‘밥이 차갑다’는 의

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대접을 잘 못 받았을 때 우리는 찬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이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차가운 밥이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집단의 공통적인 해석과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어가 통용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어떤 맥락을 갖게 되었느냐를 해석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언어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화행_{馬行}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어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설 때 그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집단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간의 언어 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크게 봐서 단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나무늘보를 세가락게으름뱅이라고 한다거나 계사니 남새, 살결물 같은 것들은 단순한 언어 차이로 주로 명사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어를 바꾸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민주주의, 세포라고 하는 말처럼 남과 북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때는 소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다음 페이지 왼쪽 사진 속 초콜릿케이크에 적힌 상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편의점에서 이 케이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어떻게 읽지?”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물어봤더니 “이 거래알 반박불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서 요즘 저는 이 단어를 가끔씩 세대를 구분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회 안에서도 세대별 경험 차이에 의해 언어문화 역시 다른 방향으로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리진영양과자'라고 하는 북한 과자입니다. '리진'이라고 하는 것은 키 크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과자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리진영양과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낯선 단어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언어문화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왼쪽 사진은 제가 예전에 중국의 어느 공항 카페에서 한글로 번역된 메뉴판을 찍은 사진입니다. 가베를 커피, 우육면을 쇠고기 국수라고 표기한 익숙한 단어도 있지만, 계속 읽어 내려오다 보

면 '미끄러운 닭고기'라는 낯선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번역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의미와 사회적인 문화까지 고려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우리나라 휴게소 카페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찍은 사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중 맛있다고 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커피업계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이런 단어나 표현을 볼 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가 구성원 내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집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인 특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언어는 언어 차이와 언어문화 차이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문화 차이는 실제로 이 언어가 어떻게 활용되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잘했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실제 어떤 일을 아주 잘했을 때 사용하기보다는 일을 잘못했을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

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물을 쏟았다거나 뒤편을 깨뜨렸을 때 어머니가 “어이구 잘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결코 잘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죠. 원래 단어와 다르게 활용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화행이라고 하는데, 남북한 간에는 특히 이런 화행에 관한 차이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강철비 2〉라는 영화에서 보면 분명히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이 얘기할 때 자막을 달아줍니다. 한국 대통령 역할을 맡은 배우 정우성 씨가 북한 군인하고 얘기하면서 “일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좀 괜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에서 “일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괜찮다, 뭐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될 만큼 저는 좋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일 없습니다” 이라면 “왜 참견하느냐, 신경 꺼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환경, 조건,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언어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 속에서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생물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과정들입니다. 예컨대 ‘삼겹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만들어진 단어, 즉 새로 태어난 단어입니다. ‘KTX’, ‘오겹살’, ‘웰빙’, ‘워라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성된 단어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면서 통용될 수 있을 때 그 단어가 새로운 가치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청소년들이나 청년층에서 쓰이는 네티즌 언어들이 통용되면서 의미를 확장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펙’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계의 성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은 어떤 사람의 경력과 학력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고 새로운 단어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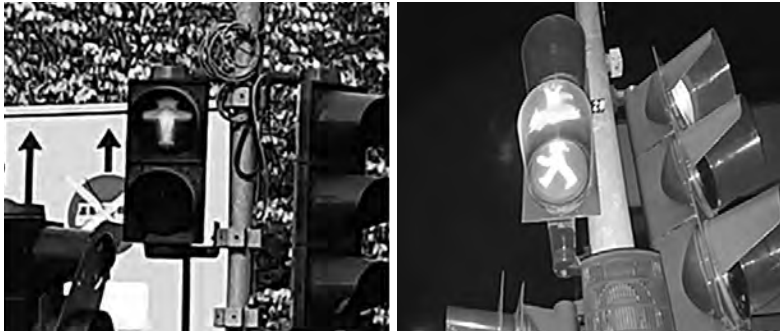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앞에서 보셨던 케이크 상표 ‘ㅇㄱㄹㅇㅂㅂㅂㅂㅂㄱ(이겨레알 반박불가)’처럼 그 집단 간의 문화적 정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통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는 우리 집에서 완전 찬밥이야”라고 할 때 ‘찬밥’을 단어 그대로 영역하면 아마 ‘cold rice’가 되겠죠. 따라서 직역을 하게 된다면 이 찬밥이 갖고 있는 문화적 의미는 그대로 번역되기 어렵습니다.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언어 소통능력

...

언어는 경제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과 연관되어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언어는 필요에 의해서 계속 생성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들과 좀 더 다른 것들이 생겨나 구분을 지을 때 새로운 단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갈수록 언어 소통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다른 문화

권 사람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서로 원만하게 소통하기 위해 의사 소통능력,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을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예측해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동독지역에는 ‘암펠르만’이라고 하는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동서독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신호등은 공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멈추고 초록불이 켜져 있을 때는 건너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독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진처럼 초록불일 때는 걸어가는 모습의 신호등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불일 때는 서 있는 모습을 표시했고요, 초록불일 때는 모자 쓴 아저씨가 건너가는 모습을 신호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의 교통사고율을 꽤 많이 낮췄습니다.

이후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교통 신호등이 서독 체계로 다 바뀌

었습니다. 그렇게 신호등이 바뀌고 동독 주민들이 출근을 하는데, 초록불이 켜져서 건너가려고 할 때 옛날처럼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고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지 못하고 정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동서독 주민들은 통일 이전에도 빈번한 교류를 통해 상대방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서로 모르는 것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동독의 암펠르만이라는 캐릭터를 살리자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동서독 주민들은 암펠르만을 하나의 캐릭터로 발전시킵니다.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들, 굿즈들이 만들어졌고 결국 암펠르만은 동서독 주민들의 소통과 통일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언어, 새로운 상징의 상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추상화된 기호로서 그 의미들이 부여됩니다. 위의 사진들을 볼까요? 노란 리본을 통해 세월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공유되면서 노란 리본은 세월호를 추모하고 기억하고 기리는 의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가지 말고 이렇게 양쪽으로 서서 가자는 의미로 말 대신 신호, 발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쓰레기통을 그냥 하나의 통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 자체를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게끔 연관된 상품 모양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휴머니움’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습니다. 실제 금속은 아니고 인간의 회복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금속입니다. 불법 소지했던 총을 녹여 금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판매해서 총기로 희생된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이런 의미와 상징

들이 부여됨으로써 ‘휴머니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코난’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명탐정 코난’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집에서 엄마나 아빠 혹은 삼촌이나 고모에게 “코난 아세요?”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두 가지 대답이 나올 겁니다. 4050 세대들이라면 “미래소년 코난 말이니?” 이런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세대의 어린 시절에 만화영화 주제가도 다 따라 부를 정도로 인기 있었던 만화였으니까요.

이처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같은 단어에 대해 경험했던 방식과 체험했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거나 연상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북한에도 ‘민주주의’라는 단어, ‘독재’라는 단어, ‘시장’이라는 단어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어를 듣거나 보았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범위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석 공동체 안에서 언어가 유통되고 언어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해석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의 내용은 어느 신문에서 나왔던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언어차이, 또 세대차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세대에 따라



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겪는 어려움 중에 언어 문제가 생각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말을 알아듣기는 하지만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어떤 표현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표현 방식이 다르다거나 이러한 차이에 의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한국 사회 내부 구성원들도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세대차이 느낄 때>

대리-신입-차장-부장 급 120명 익명채팅방

- 40대** 한쪽 옆머리 밀고 출근한 신입 직원을 봤을 때
 퇴근할 때 내게 손 흔드는 후배를 봤을 때
 직원이 본인 아빠 이야기하는 데 그 이야기가 나와 같은 때
- 30대** 회식 때 먹고 싶은 거 고르라 해서 말하니 삼겹살 먹자고 할 때
 밥 먹으러 가서 '이런 데가 유명하다', 'TV 요새 뭐가 재밌다' 말하는데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들으실 때
- 20대** 야유회 가는 거 우리에게 정하라면서 당일치기로 정하면 싫어할 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할 때

<출생 시기 따른 세대별 특징>

베이비붐 세대	1955~1963년 출생 빈곤과 고속 경제성장 함께 경험
386세대	1960년대 출생 민주화 운동 앞장, 정치적 이념 중시, 집단주의 문화
엑스(X)세대	1970~80년대 초반 출생 개인주의 문화 시작, 개성 중시, 조직에는 비교적 순응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중반~90년대 출생 저성장 시대, 취업난 경험, 조직 밖에서 자아실현 욕구,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문화 익숙
제트(Z)세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출생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 사용한 디지털 네이티브, 유튜브 세대

우리도 군사 정권 시절에는 대개 통일되고 질서정연하고 명령적이고 확실한 것들, 단결이라든가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존이라든가 개인성이라든가 이런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옛날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일과 행복의 균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 가치로 부각되면서 '워라벨'과 같은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새로운 용어들이 공유되는 세대와 그것을 공유하지 못한 세대 사이에서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년 전, 30년 전과 똑같은 사회, 즉 발전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런 언어문화 차이는 훨씬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 차이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인기 여성을 ‘현대가재미’라는 다섯 글자로 표현한답니다. 이게 뭘까요?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죠. ‘현대가재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은 현금이 있는 여성입니다. 북한도 이제 시장경제가 이루어지고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예전처럼 정치적 메시지나 사상을 중시하기보다 현실적인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대’는 대학을 나온 여성, 세 번째 ‘가’는 가족 성분과 출신 성분이 좋은 여성이고, 네 번째 ‘재’는 재간이 있는 여성이며, 마지막 ‘미’는 미인,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을까요? 아마 두 가지 답변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먹을 거야.” 또는 “안 먹을 거야.” 그런데 안 먹을 거라는 답변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북한이 삼겹살을 먹을 만한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북한에는 이 삼겹살이라는 메뉴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돼지고기라고 통용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부위 자체라든가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먹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에서는 돼지고기라고 해서 먹는데 우리는 목살, 삼겹살, 항정살 등등 구분해서 먹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처럼 문화의 차이인데도 우리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돈이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삼복’이라는 메뉴를 혹시 드셔보셨나요? ‘김삼복’이 뭘까요? 처음 들어보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외국을 나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메뉴판을 보면서 제게 김삼복을 추천했습니다. “형, 김삼복 어때요?” 그래서 “아 그게 뭐죠?” 하고 당황해서 물었더니 이게 좋으니까 한번 시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나온 걸 보니 김치 삼겹살 볶음이었습니다. 아마 김치 삼겹살 볶음 안 먹어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에 ‘김삼복’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니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언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삼겹살이라고 하는 것이 삼국시대, 신라시대,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80년대에 개발된 메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한테 물어볼 때도 “삼겹살 먹어봤니?”라고 하는 것보다 “북한에도 삼겹살이라는 메뉴가 있어?”라고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니? 돈 주고 살 수 있어?”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 선입견을 먼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토대에 기본적으로 형성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남북한 간의 언어는 같다, 다르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남북한 간에도 원래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던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단 이후 남북의 일상이 전혀 다르게 작동하면서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70년 동안에 소통 없이 진행되면서 남북한 간의 언어가 달라지고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언어에서 단어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의미까지 다른 것은 단순히 언어의 차이를 넘어 언어문화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이해하려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

이 사진은 서울역 앞에 있었던 고가 철거를 해체하고 새로 산책로를 만들었을 때 전시했던 ‘슈즈’라고 하는 전시물입니다. 신발들을 갖다 놓고 사람의 발길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아냈는데, 이것이 예술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잠시 있었습니다. 예술이 그렇듯이 언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고정되거나 불변인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를 비교해볼까요?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에게 갖는 언어적 불만사항을 보면 ‘거칠다, 공격적이다’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소통한다기보다 공동체를 위한 에티켓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북한 주민들이 남쪽 사람들에게 갖는 언어적 불만사항에는 ‘진실되지 않다’라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계속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얼굴 표정은 별로 감사하는 것 같지 않고, 무엇을 물어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도 않고, “전화할게”라고 말하고선 전화하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리고 “전화 끊을게”라는 표현 대신 “어, 그래 다음에 전화할게”라고 하면 ‘이제 전화를 끊자’라는 의미가 통용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언어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전화할게”라고 말하면 ‘전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식입니다. 반면 우리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문서나 메일과 같이 글로 합니다. 더욱이 젊은 층의 경우 통화나 대화보다는 문자를 주고받는 걸 선호합니다. 구어는 사람들과의 교제나 사교에서만 사용하다 보니 언어에서 에티켓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서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 대화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무엇인가?

- A: 여보세요, 중국집이죠.
- B: 예, 중국집입니다. 말씀하세요.
- A: 짜장면 2개, 탕수육 하나 배달해주세요.
- B: 짜장면 2개, 탕수육 하나. 부먹이시죠?
- A: 아뇨. ()입니다.

위의 대화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찍먹’입니다. 그러나 ‘부먹’, ‘찍먹’과 같은 단어를 알지 못하면, 즉 문화적 맥락을 알지 못하면 정답이 뭔지 모릅니다. “뭐라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남북한 간의 언어 이질화라고 하는 것은 언어 자체의 차이보다도 언어의 의미 차이, 일상용어의 차이 그리고 남북한 간의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 빈도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보통 인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사용하는 단어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50여 개 단어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200여 개 단어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단어 중에서 영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북한에서는 “연대, 소대, 중대, 돌격”과 같은 군사적인 용어들과 “진지 수호”와 같은 표현들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처음 나가서 카페에 갔을 때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라고 영어로 주문하고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영어 주문이 한국

말을 하듯 자연스러운 것은 영어가 그만큼 우리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북한 이탈주민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해석 공동체 속에서 언어가 달라지고 있기에 그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북한 간의 언어는 처음부터 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회와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70여 년간 조금씩 달라졌고 그로 인해 오늘날에 와서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언어 분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 그림에 있는 글자를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평 LH 아파트로 읽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처음에 저걸 보고 신평 ‘내’ 아파트라고 읽었다고 해요. 한글로 보인 거죠.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너 이사 갔다면서? 어디야?” 라고 물었더니 “어, 여기 내 아파트야”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파트가 어디 있어?”라고 했더니 “여기 내 아파트라고 쓰여 있어”라고 말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언어에서 영어가 그만큼 많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북한의 언어가 한글 중심인 것과는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남과 북의 언어정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말은 남한의 말과 어떻게 다른가

북한의 언어정책

...

북한에서는 언어를 민족적인 표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일단 쉬워야 됩니다. 남북한 언어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통속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통속이라는 단어를 별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세상에 널리 잘 통한다는 의미로 씁니다. 일찍부터 북한은 한글을 잘 통하게 하기 위해 우리말 풀어쓰기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말은 쉬워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한문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사회는 글이 중심인 사회라고 한다면 북한 사회는 말이 중심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 지도자의 언어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말씀을 큰 돌이라든가 현판 같은 곳에 새겨 넣어서 곳곳에 언어를 실천하기 위한 구호들이 전국 요소, 요소마다 다 있습니다. 최

고 지도자의 말은 무한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법 위에 있기 때문에 일체의 반대라든가 비판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대개 교사들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개념이라든가 규정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것을 동시에 외우게 합니다.

이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사회적 혁명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민대중들이 알아들어야만 당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교시라든가 혁명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고 편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일찍부터 작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전에는 국한문 혼용을 해서 법률용어나 경제용어 등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일찍부터 인민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꿔 사용했고, 그런 것들이 민족성을 지키는 언어정책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순수한 가치를 지키고 우리 문화를 지키고 나아가서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 침투에 대응하는 수단이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지요. 따라서 한자어라든가 외래어라든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민족정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며 이런 언어들은 우리 인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인민성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북한에서는 문화어를 제정하고 문화어의 제정에 맞춰서 우리말 다듬기 사업들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

...

사실 북한의 표준어는 국기, 국화 등과 같이 북한의 국가를 상징하는 것 중 가장 늦게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1967년 북한은 문화어를 제정합니다. 이로서 국어의 명칭이 남북한 사이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새로운 표준어를 만들었을까요? 민족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문화적인 정수, 순수성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표준어로 쓰고 있는 서울말이 남존여비의 썩어빠진 부르주아 말이고 일본말, 영어, 한자어가 섞인 잡탕말이므로, 이 혁명의 수도인 평양의 아름다운 말을 표준어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표준어가 서울말과 경기도 말을 기준으로 삼았듯이 북한 문화어의 표준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남도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에 언어 차이가 벌어지게 됐고, 자음과 모음, 자모의 순서도 남북한 간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단어 몇 개를 나열하게 되면 사전에서 찾는 순서가 좀 달라집니다. 제일 많이 차이나는 게 ‘ㅇ(어음)’입니다. 북한은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음가 없는 ‘ㅇ’은 사전의 맨 끝에 가 있습니다.

문화어의 특징은 두음법칙이 없어요. 두음법칙은 이제 ‘ㄹ(리울)’이 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제일 앞에 왔을 때 편의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간단히 정리합니다. “단어의 음가는 하나다. 그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이지 그 앞에 온다고 바뀌고 이건 아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된소리가 많고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의존명

사들은 다 붙여서 씁니다. 의존적이냐 명사냐에 따라 의존적이면 붙여 쓰고 명사는 독립해서 띄어쓰기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존적이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다 붙여 쓰고 고유명사 역시 다 붙여서 씁니다.



위의 사진에서 살펴볼까요? ‘룡성 배단물’, ‘룡성 사이이다’. 발음하기 어렵지 않나요? ‘녀가수’라든가 ‘룡성기계공장’ 같은 것들은 다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음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 ❖ '고간/곶간, 나라일/나랏일' 같은 사이시옷 표기
- ❖ '강둑/강둑, 날자/날짜, 색깔/색깔' 같은 된소리 표기
- ❖ '길차비/길채비, 남비/남비, 비계/비계, 폐(肺)/폐' 같은 모음 표기
- ❖ '거부기/거북이, 통졸임/통조림, 곰공히/곰공이' 같은 접미사 표기
- ❖ '고뿌/컵, 라지오/라디오, 골/골(goal), 탕크/탱크, 빠나나/바나나, 로봣/로봣, 마라손/마라톤' 등 외래어 차이
- ❖ '날집슴/날짐슴/날짐슴, 앞다[압따/알따], 머리빚[머리빚/머리빚]' 처럼 겹받침의 발음과 된소리 발음의 차이

앞에 있는 단어들이 북한에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된소리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꿀, 땅크, 라지오, 빠나나, 마라손 등 외래어 표기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건 ‘고뿌’라는 단어인데요. 북한에는 ‘고뿌’를 표준어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이 저한테 와서 왜 우리말을 놔두고 자꾸 영어를 쓰냐면서 ‘고뿌’라고 해야지 왜 ‘컵’이라고 하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뿌가 일본식 발음인데요”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국가 표기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터키’라고 하지만 북에서는 ‘뚜르끼’라고 합니다. ‘외래어는 그 나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원칙은 똑같지만 그 나라 소리 자체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를 몇 개 더 들어볼까요? 우리는 ‘노략질’, 북한은 ‘로략질’이라고 하고, “괜찮다”,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아주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시장’이라는 단어 대신 ‘시인민위원회 위원장’, 혹은 ‘시인민위원회 책임비서’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래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즈’를 ‘가재천’, ‘필라멘트’를 ‘탕그스텐’으로 표현합니다. 대체로 보면 언어차이를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음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숫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삼각 너트’라

고 할 때 다 한글로 쓰는데 북한은 ‘3각’이면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숫자를 밝혀서 적습니다.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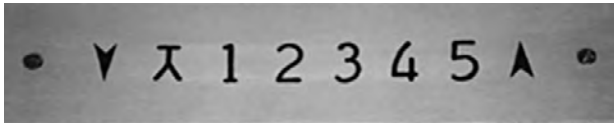
...

북한은 1967년 언어 표준을 새로 정한 다음에 언어 다듬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북한에서 뭐라고 할까요? ‘얼음보숭이’ 아니냐고요?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요. ‘얼음보숭이’는 외래어를 그대로 쓰지 말고 우리말로 다듬어 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권장어일 뿐입니다.

과도하게 외래어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말의 고유성을 살리기 위해 권장하는 우리말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듯이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다듬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주 쓰는 한자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을 만들어서 가능한 한자를 쓰지 않고 우리말을 쓰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말이 없으면 한자를 풀어서 씁니다. 홍수는 ‘큰물’,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추수는 ‘가을걷이’, 침엽수는 ‘바늘잎나무’, 위약금은 ‘어김돈’, 적립금은 ‘세운돈’ 이렇게 대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쓸까요?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잘 안 씁니다. 예를 들어 소프라노 이려면 “녀성 고음, 녀성 고음 가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북에서 권장하는 주요 단어들이고 그냥 소

프라노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생활 속에 녹아들어서 정립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사회적 공동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성공하면 언어로 정착이 되는 것이지요.



이건 북한 엘리베이터 사진인데요. 1, 2, 3, 4, 5와 올라가고 내려가는 표시와 함께 왼쪽 끝에 ‘지’이 있죠. 저 ‘지’은 지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B’라고 쓰잖아요. 왜 B라고 쓸까요? 이유는 없어요. 선택된 단어죠. 우리는 지하라는 의미로 B를 쓰고 4라고 안 쓰고 F라고 쓰잖아요. 반면 북에서는 저렇게 씁니다.

외래어는 가능한 고유어로 대체를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외래어 사용을 못하게 했을 때 패널티 킥을 ‘11미터 벌칙차기’라고 한다거나 공격수, 수비수, 문지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북한도 지금은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북한은 10여 년 동안에 우리말을 다듬는 사업을 홍보하고 알린으로써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한국식, 순 우리말을 살리는 쪽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정치용어 말다듬기 사업은 예외적입니다. 정치용어는 수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라”와 같은 문장에서 “혁명, 수뇌부, 결사옹위”는 모두 한자인데 이걸 말로 바꿀 수가 없고, 바꾼다 해도 구호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북한의 언어 철학과 글쓰기 원칙

...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쉽고 이해할 수 있고 인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글을 읽기 쉽게 써야 되고 통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언어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글을 보면 문장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확한 주어, 서술어 구조로 되어 있어 보는 순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장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의 글들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문장과 어투는 인민에 맞게끔 써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좋은 문장일까요? 한문투가 배제되고 짧은 것, 그다음에 군더더기가 없고 발음이 까다롭지 않은 것,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방송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의 뉴스 방송은 굉장히 정확하게 짧은 단어와 언어를 사용합니다. 들으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진을 보면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라는 구호가 나옵니다. 무슨 메시지인지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명확하고 직관적이죠. 딱 보는 순간 의미를 알 수 있는 언어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생활을 하다 보니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돌려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특히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거절의 표현입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바로 얘기를 해야지 돌려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는 어느 수준에 왔을까요? 저는 소통과 불통 사이에 와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어 차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미상의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세포’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99.9%는 생물에서 배우는 세포를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세포라고 하는 단어는 생물과 관련되지 않고서는 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에서 ‘세포’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의 99%는 ‘노동당 세포, 당세포’를 먼저 떠올립니다. 얼

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당세포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듣거나 말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숙 여사(김일성의 처, 김정일의 생모)나 어머니로서의 당, 즉 노동당’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문학과 예술, 노래 가사 속에 어머니라고 표현된 것들은 다 노동당이기에 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신체가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남북한 간의 언어는 사회생활과 사회 경험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식 표현의 상품명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도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북한의 병원 간판입니다. 보면 ‘렌트겐’이라든가 ‘CT’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 오른쪽 사진은 중국 단둥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간판입니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보는 중국 도시여서 북한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여럿 있지요. 한글로 쓰여 있지만 이 한글은 우리식, 그러니까 남한식 표현이 아니고 북한식 표현으로 상품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뿔루올, 아세톤, 비닐박막’ 이런 건 다 북한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언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북한 맥주 중에 대동강 맥주가 있습니다. 라벨에 숫자가 있는데요. “몇 호로 드릴까요?”하면 숫자를 부르면 됩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숫자가 있어서 도수에 따라 맥주 기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달라고 그러자 “오징어는 없는데 낙지 드실래요?”라고 말했는데 나온 것을 보니 오징어였습니다. 오징어와 낙지의 의미가 남북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기능성 판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렇게 판 모양으로 생겼다고 ‘판겜’이고요. ‘붕지 방울겜’은 날개로 포장된 풍선겜. 풍선겜이라고 그러지 않고 ‘방울겜’이라고 표현합니다. ‘초콜레트’의 래이 풀이도 좀 다릅니다. ‘크림빵, 단빵, 알빵’ 이렇게 돼서 풀이도 좀 다릅니다.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나는 점도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2018년에 북에서 나온 화장품 카탈로그입니다. 여기 보시면 ‘살결물, 물크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통용이 됐죠. 그런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이걸 다 우리말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화장품 색 같은 걸 ‘눈등분’이라든가 ‘떡크림’으로 바꾸기는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 트렌드를 수용해서 외래어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북한말 중 하나가 ‘얼음보숭이’입니다. 왼편의 아이스크림 카탈로그를 보면 알겠지만 ‘얼음보숭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물론 간혹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다만 딱딱한 아이스크림은 ‘에스키모’라고 불러요. 북한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걸 에스키모라고 부릅니까?” 물었더니 “그럼 남에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라고 부른다고 했더니

딱딱해서 하드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차갑고 얼음모양이니까 에스키모가 연상되어 그렇게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 사진은 ‘에네르기’라고 하는 5·1 종합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건강음료식품들입니다. 언뜻 봐도 역기처럼 생겼잖아요? ‘에네르기(에너지)’ 식품, 즉 건강제품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언어에서 왜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론은 없습니다. 누군가 사용하는 언어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통용되고 그렇게 자리 잡힌 언어에 의미들이 부여되면서 언어의 개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알아야 할 언어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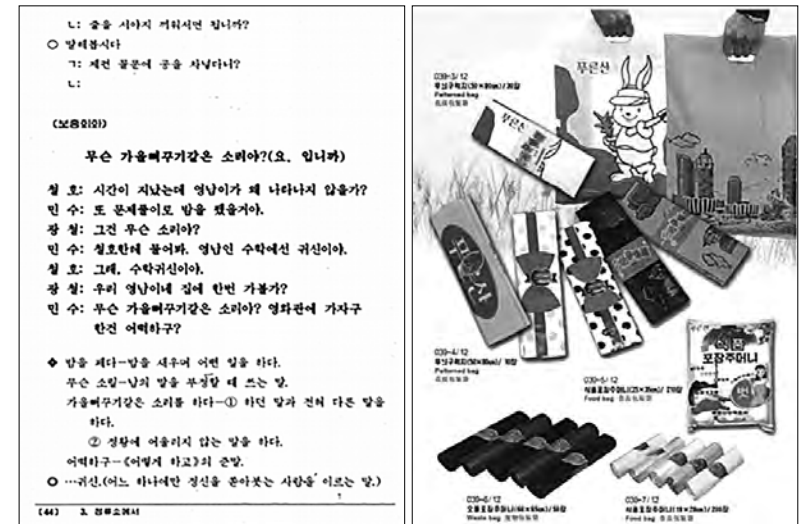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언어 문제

북한은 발화 태도 역시 우리와 언어문화가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명시성을 강조합니다. 늘 대면하는 사이에서는 문서로 하는 것보다도 말로 정확하게 전달해서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언어가 여전히 명시적이고 직설적인 언어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같은 직장에 있거나 친구 사이라도 내일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언어 예절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례적으로 던지는 용어를 북한 사람들은 명시적인 언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밥 한번 먹자”, “야, 우리 다음 주에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남한 사람들이 “야, 우리 뭐 먹을래?” 이렇게 질문하면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며 “밥 먹자 그러지 않았냐?”라고 반문합니다. “밥 먹자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 먹을래?” 이런 답변이 반복되는 코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야, 아무 때나 찾아와. 밥 한번 먹자”라고 해서 아무 때나 찾아가면 예의도 없이 찾아왔다고 오해할 수도 있죠.

이런 언어적인 차이들이 이미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남한 사람이 다 됐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나 하면 이런 의미들을 알아들을 때라고 합니다. 처음 와서 유머 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저게 왜 웃기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해보면 의미와 맥락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회화 책입니다. 회화 책에서 보면 “무슨 가을 뼈꾸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을 뼈꾸기가 어떤 의미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뼈꾸기는 가을에 나타나지 않아요. 봄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북한 상품이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북한에서는 ‘구력지’라고 해요.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구력지가 뭐야?”라고 묻겠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저게 구력지야. 아니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어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이런 거예요. “점심 뭐 먹을까요?” “뭐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한민국의 95%는 “아, 저는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매너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먹고 싶거나 꺼리는 음식이 있잖아요. 다만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까봐 맞춰가는 합의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칼국수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죠. “오래간만에 일식 어때, 중국집 어때, 한식 좋아요?” 혹은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합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맞춰 보고 합의되는 과정에서 언어가 에티켓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Good morning” 하면 “How

are you?” 하듯이 대충 주고받는 언어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간 문화가 다르니까 이 패턴 구조가 깨지게 되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야, 내가 아무리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어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대답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언어가 아닌 언어문화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언어문화는 사회의 외부 사람들은 결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말을 발음하는 것을 들으면 어디서 왔는지 구분이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이후의 상황이 연상이 되는 거죠.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대답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걸 물어보겠구나.’ 자신이 북한 사람임을 알고 편견을 갖고 바라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언어문화는 소수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남북한 언어 차이

...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영어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는 여러 매뉴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거나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려고 할 때 배우는 언어들 그리고 보험회사 약관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계약서 등에서 영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습니다. 사실 핸드폰도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cell phone’이라는 영어를 놔두고 핸드폰, 휴대폰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것을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쓰는 것이 표준이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쓰는 것은 둘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물옵션이라든지 무담보대출과 같은 남한의 경제용어를 북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듯이, 북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후방참모, 돌격대, 화선입당이라는 단어들은 우리에게 전부 다 설명이 필요한 용어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개방됐을 때 제가 처음 중국에 가서 사기 비슷한 걸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산삼을 팔고 있었어요. 중국인이 아주 어설픈 우리말로 “산삼, 한국 돈 만 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산삼이에요?”라고 물어봤더니 “진짜 산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은 삼을 산에서 키워요. 그래서 산삼은 재배 삼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삼, 자연산 삼은 북에서는 ‘들 야(野)’ 자를 써서 ‘야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산삼이냐고 물어봤는데 그 중국 사람은 산삼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말했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단어가 백퍼센트 정확하거나 표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문득 남북한 언어 소통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북한 이탈주민들은 언어로 인해 적지 않은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 취업과 관련해 경제 교육에서 직업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언어 교육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언어 에티켓이라는 예절을 알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상적인 대화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 특히 경제 용어 등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도 예전에 집을 살 때 균등분할이라든지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시장 경제 용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언어 교육의 부재가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과 언어 공동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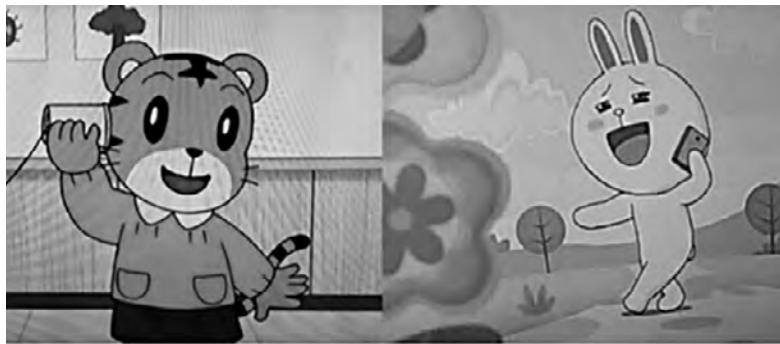
제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중에 청중들이 제일 좋아했고 의미 있었던 내용은 남한 사람들의 간접표현이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런 표현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배울 필요도 가르쳐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내일까지 좀 해줄 수 있어?”, “내일 좀 시간이 돼?”라고 물어볼 때는 가능하면 시간을 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방이 “저 시간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청유형으로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라고 묻는 질문은 사실 명령형으로 “야, 이것 좀 해”라는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시간에 관한 표현이 까다롭습니다. 대체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뭐 급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내일 모레까지는 해야 됩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시고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해달라고 하는 거죠. “가급적 좀 빨리 해줄 수 있으면 고맙지 뭐.” 이런 표현은 바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북한 사람들은 안 합니다. 급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처리를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북한의 언어 전달 방식이니까요.

이처럼 언어 사용 방식, 언어문화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남북한 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통용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림을 보면 호랑이하고 토끼가 통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라고 전화를 하는데 잘 들릴까요? 당연히 잘 안 들릴 거예요. 왜냐고요? 동물들은 귀가 어디가 있어요? 머리 위에 있습니다. 통화할 때는 귀에다 폰을 대야 하는데 왜 볼에 댄 것으로 그려올까요? 그 이유는 이 그림을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전화를 받을 때 위치로 그린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전혀 어색하게 느끼지 않았겠지요. 내가 속해 있는 언어문화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자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언어는 계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와이파이, 뇌섹남, 된장녀, 극혐.’ 이런 단어들은 새로 생겨났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들이죠. 그다음에 ‘워라벨, 촌데레, 덕후, 낫닝겐.’ 이런 표현들은 나이든 분들 중에는 이해 못하는 분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단어는 남한의 청년층에게는 이미 올드한 단어가 됐지만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단어들이입니다. 그런데 북한 청년들은 이런 단어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북한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북한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을 같은 자리에서 만났는데 어찌다가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야기가 나왔어요. <강남 스타일>이 화제가 되니까 중국 사람들은 <강남 스타일>의 춤동작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보고 북한 학생들은 많이 놀라더군요. “도대체 강남 스타일이 뭔가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대학교 2학년 학생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과 문화적 경험을 가장 많이 공유한 대학생은 어느 나라 대학생일까요? 한국의 21세 대학생의 경험치를 북한의 21세 대학생 또는 일본, 중국, 유럽에 있는 21세 대학생이 겪었던 경험치와 비교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성장하면서 배우고 익혔던 문화적 경험치와 우리 대학생들이 듣고 즐기고 익혔던 문화적 경험치 사이의 공통성을 발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하는 언어와 의미 여부, 맥락들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걸 생각해보면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남북한 언어 차이는 상당한 차이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북한 사이에서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게 될 때 거기에 해석을 붙이거나 각주를 붙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남북한은 소통 없이 70년을 지내왔고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흐른다면 그야말로 이중 언어를 써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언어와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MZ세대가 궁금해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이야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발행일 | 2021년 12월 22일

지은이 | 문정인, 홍현익, 조성렬, 유호근, 천해성, 이기완, 전영선

펴낸곳 | 국립통일교육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 02-9017-162

기획 | 국립통일교육원

편집 및 제작 | (주)메디치미디어

©국립통일교육원, 2021

- 이 책은 국립통일교육원이 청주대학교, 국민대학교, 을지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2021학년도 1학기 <통일특강>의 내용을 글로 엮어 출간한 것으로, 통일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전제·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국립통일교육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